2024. 4.

국회예산정책처 I 재정동향&이슈 I 제24호

NABO 재정동향&이슈

NABO Fiscal Trends & Issues

CONTENTS

주요 재정지표

주요 재정동향&이슈 |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주요내용
2023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발표

해외재정동향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년 중간 경제전망보고서 발표
미국, 2024회계연도 예산 확정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Fiscal Trends & Issues
재정동향&이슈

2024년 Vol. 1 통권 제24호

CONTENTS

주요 재정지표 / 3

총수입·총지출 / 4
재정수지 / 5
중앙정부 채무 / 6

주요 재정동향 & 이슈 / 9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주요내용 / 10
2023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 14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발표 / 18
글로벌 녹색산업 육성방안 발표 / 2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25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 / 29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 33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발표 / 36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발표 / 40
바이오제조 혁신전략 발표 / 43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4대 혁신방안 발표 / 47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확정 / 50
2024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 53

해외재정동향 / 57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 5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년 중간 경제전망보고서 발표 / 61
미국, 2024회계연도 예산 확정 / 65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재정지표

- 총수입·총지출
- 재정수지
- 중앙정부 채무

총수입·총지출

2024년도 2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7.2조원 증가한 97.2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1.5%p 증가한 15.9%

- 총수입의 증가는 전년동기 대비 국세수입이 3.8조원, 기금수입이 3.4조원 증가하는 등 각 항목의 전반적인 증가세에 기인함. 다만, 세외수입은 5.5조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2024년도 2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2.5조원 증가한 127.1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1.5%p 증가한 19.4%

- 총지출의 증가는 특별회계 지출 8.1조원 증가, 기금 4.4조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전년동기 대비 이전지출 및 자산취득 집행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2023·2024 회계연도 총수입·총지출 실적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2024(잠정)				전년동기 대비	
	본예산 (A)	결산	2월 (누계, B)	진도율 (C=B/A)	본예산 (D)	2월 (당월)	2월 (누계, E)	진도율 (F=E/D)	누계 (E-B)	진도율 (F-C)
◆ 총수입	**625.7**	**573.9**	**90.0**	**14.4**	**612.2**	**30.1**	**97.2**	**15.9**	**7.2**	**1.5**
• 국세수입	400.5	344.1	54.2	13.5	367.3	12.1	58.0	15.8	3.8	2.3
• 세외수입	25.0	28.5	5.5	22.1	28.2	3.1	5.5	19.6	0.0	△2.5
• 기금수입	200.3	201.1	30.3	15.1	216.7	14.9	33.7	15.5	3.4	0.4
(사회보장성기금)[1]	114.6	122.3	18.3	16.0	123.8	9.6	19.0	15.3	0.7	0.7
• 세입세출외	-	0.3	-	-	-	-	-	-	-	-
◆ 총지출	**638.7**	**610.7**	**114.6**	**17.9**	**656.6**	**71.2**	**127.1**	**19.4**	**12.5**	**1.5**
• 예산	441.1	413.1	84.5	19.2	438.3	50.8	92.6	21.1	8.1	1.9
- 일반회계	369.4	343.5	73.0	19.7	356.5	37.6	73.0	20.5	0.0	0.8
- 특별회계	71.6	69.6	11.5	16.1	81.7	13.2	19.6	23.9	8.1	7.8
• 기금	197.7	196.5	30.1	15.2	218.4	20.4	34.5	15.8	4.4	0.6
(사회보장성기금)[1]	69.5	72.0	12.0	17.3	76.6	6.2	12.6	16.5	0.6	△0.8
• 세입세출외	-	1.0	-	-	-	-	-	-	-	-

주: 1)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년 4월호(2024. 4.)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수지

2024년도 2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9.9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5.3조원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36.2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5.3조원 증가

-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7.2조원 증가하였으나,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12.5조원)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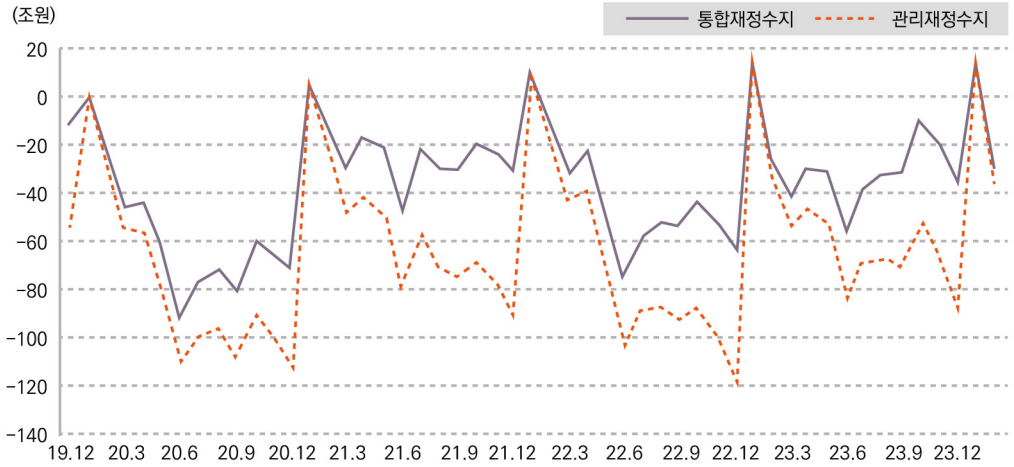
2023·2024 회계연도 재정수지 실적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2024(잠정)				전년동기 대비	
	본예산 (A)	결산	2월 (누계, B)	진도율 (C=B/A)	본예산 (D)	2월 (당월)	2월 (누계, E)	진도율 (F=E/D)	누계 (E-B)	진도율 (F-C)
◆ 총수입(A)	625.7	573.9	90.0	14.4	612.2	30.1	97.2	15.9	7.2	1.5
◆ 총지출(B)	638.7	610.7	114.6	17.9	656.6	71.2	127.1	19.4	12.5	1.5
◆ **통합재정수지(C=A-B)**	**△13.1**	**△36.8**	**△24.6**	-	**△44.4**	**△41.1**	**△29.9**	-	**△5.3**	-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D)	45.1	50.3	6.3	-	47.2	3.4	6.3	-	0.0	-
◆ **관리재정수지(E=C-D)**	**△58.2**	**△87.0**	**△30.9**	-	**△91.6**	**△44.5**	**△36.2**	-	**△5.3**	-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년 4월호(2024. 4.)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2024. 4.)

중앙정부 채무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1,092.5조원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1,033.4조원 대비 59.1조원 증가

- 국채의 경우 전년 결산 대비 59.6조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민주택채권 및 외평채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고채권이 전년 결산 대비 60.5조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정부 채무는 지방정부 순채무를 제외한 값임

2021~2023년도 중앙정부 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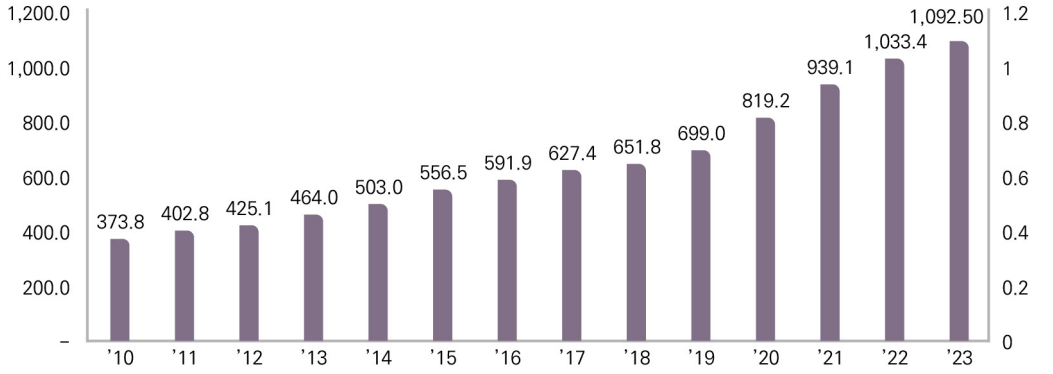
(단위: 조원)

구 분	2021	2022	2023		
	결산	결산(A)	본예산	결산(B)	전년 결산 대비(B-A)
◆ **중앙정부 채무**	**939.1**	**1,033.4**	**1,101.7**	**1,092.5**	**59.1**
• 국채[1]	937.0	1,031.5	1,100.3	1,091.1	59.6
- 국고채권	843.7	937.5	999.0	998.0	60.5
- 국민주택채권	82.2	82.2	86.8	81.6	△0.5
- 외평채권(외화)	11.2	11.8	14.5	11.5	△0.3
• 차입금	2.0	1.9	1.2	1.2	△0.7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1	0.2	0.2	0.1

주: 1) 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등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중앙정부 채무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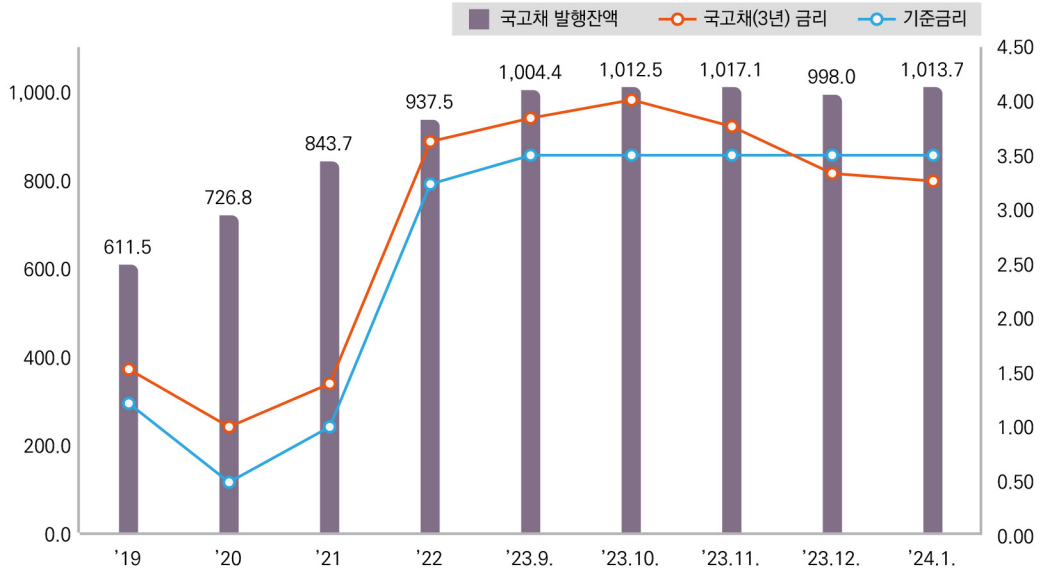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1월말 기준 국고채 발행잔액 규모는 1,013.7조원으로, 2023년말 998.0조원 대비 15.7조원 증가

- 국고채 금리(3년 만기 기준)는 2020년 최하점(0.99%)을 기록한 후,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2023년 10월 기준 4.03%까지 상승하였으나,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2023년 12월까지 3.35%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2024년 1월 기준 3.27% 수준
- 기준금리는 2020년 기준 0.50%로 최하점을 기록하였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2023년도 1월까지 3.5%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흐름을 지속함에 따라 2024년 1월 기준까지 3.5%로 동결 유지

국고채 발행잔액, 국고채(3년) 금리 및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조원, %)



주: 1. 국고채 발행잔액은 국고채 총 발행액 중 총 상환액을 제한 금액으로, 기간별 순발행 금액의 누적 합계를 의미함
2. 국고채 금리 및 기준금리는 해당 기간 중 평균금리를 의미함
자료: e-나라지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사회예산분석과 김민석 예산분석관(02-6788-4638)

주요 재정동향 & 이슈

-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주요내용
- 2023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발표
- 글로벌 녹색산업 육성방안 발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발표
-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발표
- 바이오제조 혁신전략 발표
-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4대 혁신방안 발표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 확정
- 2024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주요내용

세입·세출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 총세입·세출 결산 개요

-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특별회계 총계 기준으로 총세입은 497.0조원, 총세출은 490.4조원이며,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6.5조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3.9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이 발생함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단위: 조원)

구 분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E=C-D)
합 계	497.0	490.4	6.5	3.9	2.7
일반회계	407.9	405.9	2.0	2.0	0.04
특별회계	89.0	84.5	4.5	1.9	2.6

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결산

-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은 497.0조원으로 예산액 534.0조원 대비 37.0조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56.4조원 미수납되고, 세외수입은 예산 대비 19.4조원 초과수납되었기 때문임

2023회계연도 세입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2022 실적 (A)	2023		2023 예산대비 (C-B)	2022 대비 (C-A))
		예산(B)	실적(C)		
총세입	573.9	534.0	497.0	△37.0	△77.0
국세수입	395.9	400.5	344.1	△56.4	△51.9
세외수입	178.0	133.5	152.9	19.4	△25.1

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 결산
  -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출은 예산현액 540.0조원의 90.8%인 490.4조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9.3조원이 감소된 규모임

2023회계연도 세출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022 실적 (A)	2023			2022 대비 (C-A))
		예산현액(B)	실적(C)	집행률(C/B*100)	
총세출	559.7	540.0	490.4	90.8	△69.3
일반회계	485.0	449.1	405.9	90.4	△79.2
특별회계	74.7	90.9	84.5	93.0	9.8

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총수입·총지출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1)]

-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까지 포괄하는 2023회계연도 총수입은 예산 625.7조원 대비 51.8조원 감소한 573.9조원 수준이며, 총지출은 예산 638.7조원 대비 28.0조원 감소한 610.7조원을 집행하였음
  - (통합재정수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예산 대비 23.7조원 악화된 36.8조원 적자를 시현하였음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예산 대비 28.8조원 악화된 87.0조원 적자를 시현하였음

※ 2023년 56.4조원의 국세수입 결손에 대해서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 조정(18.6조원),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활용(19.9조원),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 미상환(8.6조원) 등으로 대응

2023회계연도 총수입·총지출 결산 결과

(단위: 조원)

구 분	2022 실적 (A)	2023		2023 예산대비 (C-B)	2022 대비 (C-A))
		예산(B)	결산(C)		
Ⅰ. 총수입	617.8	625.7	573.9	△51.8	△43.9
Ⅱ. 총지출	682.4	638.7	610.7	△28.0	△71.7
Ⅲ. 통합재정수지 (Ⅰ-Ⅱ)	△64.6	△13.1	△36.8	△23.7	27.8
Ⅳ.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2.5	45.1	50.3	5.1	△2.2
Ⅴ. 관리재정수지 (Ⅲ-Ⅳ)	△117.0	△58.2	△87.0	△28.8	30.0

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 총수입·총지출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도입된 개념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금융성 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함.

국가채무

- 2023년 말 국가채무는 1,126.7조원으로 2022년 말에 비해 59.4조원 증가하였고, GDP 대비 비율은 1.0%p 상승하였음(2022년: 49.4% → 2023년: 50.4%)
  - (국가채무의 구성)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국채가 국가채무의 96.8%(1,091.1조원)를 차지하고 있음
  - (국가채무 증가요인) 국가채무가 2022년 말 대비 59.4조원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고채 증가(54.3조원) 등에 주로 기인

※ 다만 주택거래량 변동 등으로 국민주택채권이 감소(86.8조원→81.6조원)하여 2023년 예산 대비 국가채무는 7.6조원 감소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 결산 (A)	2023		2023 예산대비 (C-B)	2022 대비 (C-A))
		예산(B)	결산(C)		
국가채무	1,067.4	1,134.4	1,126.7	△7.6	59.4
(GDP 대비)	(49.4)	(50.4)	(50.4)	(△0.1)	(1.0)
• 중앙정부	1,033.4	1,101.7	1,092.5	△9.2	59.1
- 국채	1,031.5	1,100.3	1,091.1	△9.2	59.6
- 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2.0	1.4	1.4	-	△0.6
• 지방정부 순채무	33.9	32.6	34.2	1.6	0.3

주: 1 지방정부 순채무는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전망치 기준임
2.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재무제표

-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은 3,014.5조원, 부채는 2,439.3조원이며, 순자산(자산-부채)은 575.2조원임
  - 자산은 전년 대비 180.9조원(6.4%), 부채는 전년 대비 113.3조원(4.9%)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67.6조원(13.3%)이 증가함

※ 자산의 증가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13.6%)

※ 부채의 증가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 증가 등(+60.0조원)과,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가치액(연금충당부채) 증가(+48.9조원) 등에 기인

자산·부채 구성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2 (A)	2023 (B)	증감액 (C=A-B)	증감률 (C/A*100)
■ 자 산	2,833.6	3,014.5	180.9	6.4
• 유동자산	513.8	556.1	42.3	8.2
• 투자자산	1,148.8	1,276.2	127.5	11.1
• 일반유형자산	710.4	721.0	10.6	1.5
• 사회기반시설	422.9	423.3	0.5	0.1
• 무형자산	2.5	2.8	0.3	10.6
• 기타비유동자산	35.2	35.1	△0.1	△0.4
■ 부 채	2,326.0	2,439.3	113.3	4.9
• 확정부채(국·공채, 차입금 등)	907.4	967.4	60.0	6.6
• 비확정부채	1,418.6	1,471.9	53.3	3.8
- 연금충당부채 (미래연금 지급액)	1,181.3	1,230.2	48.9	4.1
- 기타 충당부채 (보증·보험 등)	62.0	63.0	1.0	1.6
- 기타 발생주의 부채 (청약저축 등)	175.3	178.7	3.4	1.9
■ 순 자 산(=자산 - 부채)	507.6	575.2	67.6	13.3

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예산분석총괄과 이규민 예산분석관(02-6788-4625)

2023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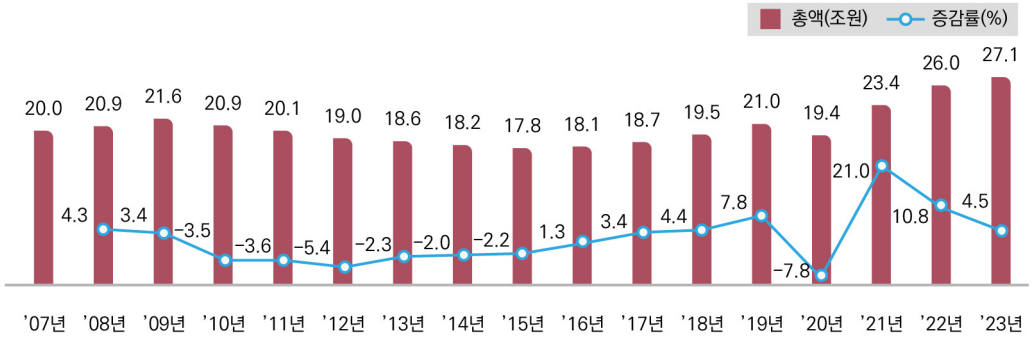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교육부, 2024. 3. 14.)

- 본 조사는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
- 조사의 목적은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학원수강,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교재비 포함) 지출 비용을 의미함

사교육비 총액 및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

-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 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

사교육비 총액 추이: 2007~2023년



자료: 교육부, 2023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4. 3.

- 2023년 전체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 사교육 참여학생은 5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8%, 5.5% 증가
  -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중 고등학교가 74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다른 학년에 비해 높았음

2023년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

구 분	전체학생				사교육 참여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22년	41.0	37.2	43.8	46.0	52.4	43.7	57.5	69.7
2023년	43.4	39.8	44.9	49.1	55.3	46.2	59.6	74.0
증감률	5.8	6.8	2.6	6.9	5.5	5.7	3.7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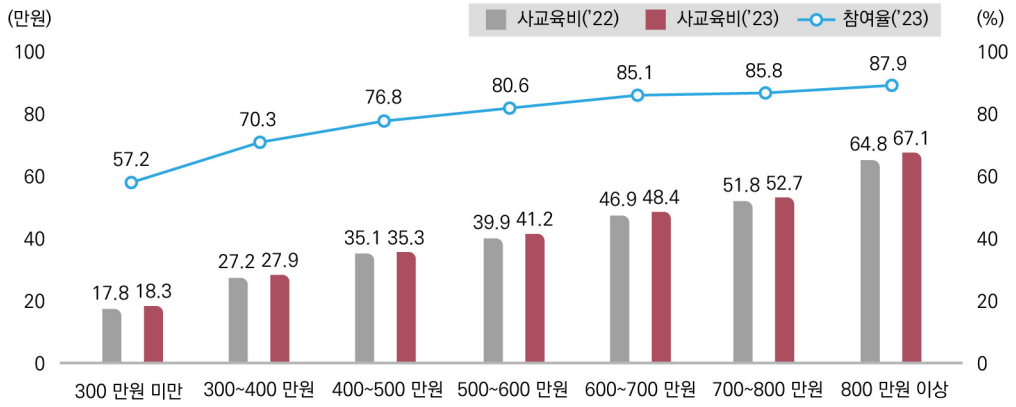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2023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4. 3.

- 자녀수가 1명인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8만 6,000원, 자녀수 2명은 45만 6,000원, 자녀수 3명 이상은 33만 4,000임을 고려하면, 자녀수 3명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100만 2,000원)는 자녀수 1명 가구(48만 6,000원)의 2배 수준임
- 2023년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대비 0.2%p 증가, 주당 참여시간은 7.3시간으로 전년대비 0.1시간 증가

가구 소득수준 및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격차 지속

-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음
  - 2023년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수준은 소득수준 800만원 이상 가구의 27.3%에 그침

2023년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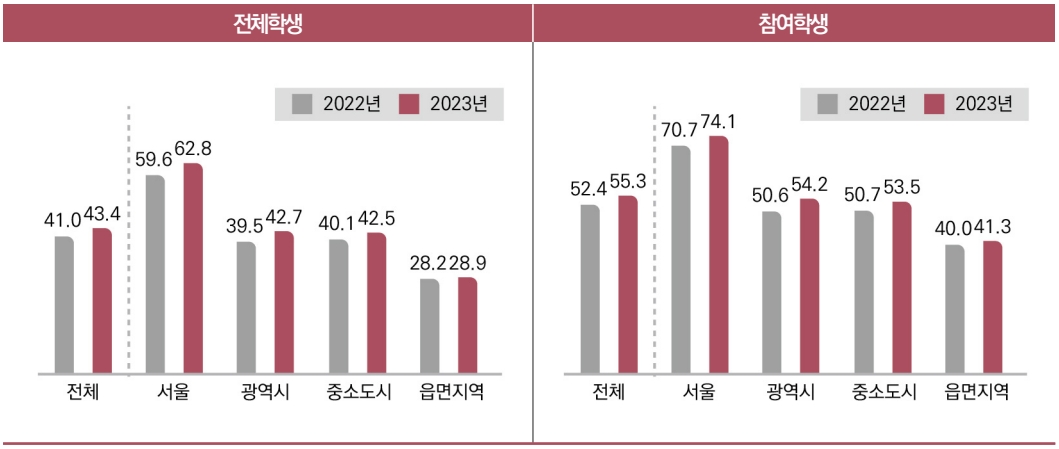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2023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4. 3.

● 전체학생과 참여학생 모두 4대 지역 중 서울의 사교육비가 가장 높음

2023년 지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자료: 교육부, 2023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4. 3.

● 2023년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역별로는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는 70만원 이상, 읍면지역은 10~20만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2023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 구간별 분포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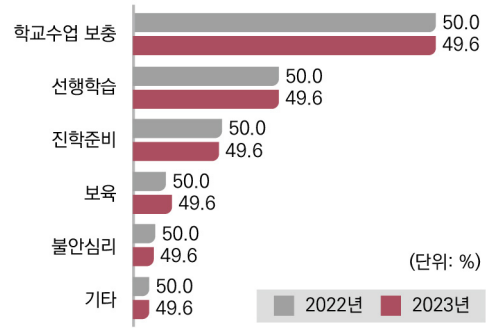
구 분	받지 않음	10만원미만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60만원	60~70만원	70만원이상
2022년	21.7	4.9	10.7	9.4	9.8	9.4	8.4	6.5	19.1
2023년	21.5	3.9	10.2	8.9	9.4	9.0	8.3	6.7	22.0
증감	△0.2	△1.0	△0.5	△0.4	△0.4	△0.5	△0.1	0.2	2.9
서울	15.2	3.4	7.1	6.4	7.0	6.7	7.5	7.4	39.2
광역시	21.3	3.9	10.4	8.4	9.2	9.4	8.8	7.3	21.2
중소도시	20.5	3.6	10.1	9.4	10.0	9.6	8.7	7.0	21.2
읍면지역	30.1	5.2	13.3	10.7	10.4	8.7	7.4	4.5	9.6

자료: 교육부, 2023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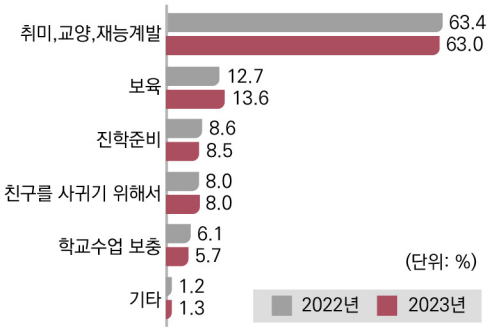
학교수업 보충, 선행학습 등을 목적으로 사교육 수강

- 2023년 사교육 수강목적은 일반교과의 경우 학교수업 보충 49.6%, 선행학습 24.0%, 진학준비 14.2%이며, 예체능의 경우 취미·교양·재능계발 비중(63.0%)이 가장 높음

2023년 일반교과 사교육 수강목적별 분포



2023년 예체능 사교육 수강목적별 분포



자료: 교육부, 2023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4. 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기존 공교육 패러다임은 평균 학생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교육이 증가하고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공교육을 통해 사교육을 흡수할 필요 있음
  - 공교육 디지털 개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2023년 12월 21일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 교육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집행하여 공교육 혁신 성과 달성 필요

    ※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2026년 3년간 한시적으로 3%에서 3.8%로 조정하고, 인상한 0.8%p에 해당하는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2024년 5,333억원)을 초·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AI 맞춤형 초·중등 방과후 학교 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이 2024년 4월 14일 발의되었음

    ※ 국가가 책임지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양성하는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처방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구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동 개정안의 취지임

사회예산분석과 김성은 예산분석관(02-6788-4635)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발표(2024. 3. 27.)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등에 대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추진배경) 고금리 장기화와 고물가 지속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건설사 경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자 중 99%를 차지하며 고용의 81% 이상을 책임
  - 생활밀착 업종 매출 부진과 코로나 기간 중 대출 증가 등에 따른 이자부담 확대
  - 자재비·인건비 상승,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부동산 PF 사업성 악화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주요 내용

-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 중소기업 경영상황별 자금 지원 40.6조원
    - 중소 → 중견기업 성장 단계별 보증 확대(기업당 최대 100억원 → 500억원)
    - 신산업 진출 및 사업확장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인하 등 우대조치
    - 고금리·고물가 대응을 위한 우대 정책자금 제공 12.3조원
    - 매출하락 등으로 인한 대출상환 곤란 기업 금리 인하(1년간 최대 2%p)
  - 중소기업 기술보증 공급규모 1조원 상향(27.5조원 → 28.5조원)
  - 지역신용보증기금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0.04% → 0.07%)
  - 소상공인 3.2만명에 대한 신규 보증 추가 공급(22조원 → 23조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확대 공급(3조원 → 3.7조원)

- 소상공인 이자경감
  - 은행권 자체재원 활용 개인사업자 이자 환급 1.5조원(인당 최대 300만원)
  - 정부재정 지원 중소금융업권 차주 이자 환급 0.3조원(인당 최대 150만원)
  -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
    - '22.5.31.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23.5.31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
- 재기 및 정상화 지원
  -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코로나 피해 요건 폐지)
  -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
  -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사면 및 성실경영 재창업자 불이익 정보 금융기관 공유 제한 추진
  -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감면(1년간 3%대 금리 제공)
- PF사업장 금융지원 강화
  - HUG·주택금융공사 PF사업자보증 공급 규모 5조원 확대(20조원 → 25조원)
    - (HUG) 15조원 → 17조원, (주금공) 10조원 → 13조원
  -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 완화
    -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 미요구
  - 일시적 유동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PF 정상화 펀드 신규자금 대출 허용
    - PF채권 할인매입 없이 추가 신규자금 대출 가능
- 건설사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
  - 시장안정프로그램 자금 활용을 통한 약 8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관련 건설사 지원
  - 부동산PF 대출 이자, 수수료 관련 불합리 사항 파악을 위한 부과실태 점검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 중견기업 성장 단계별 보증 확대 - 신산업 진출 및 사업확장 중소기업 우대금리 적용 - 고물가·고금리 대응 우대 정책자금 제공 - 대출상환 곤란 기업 은행권 금리 인하 - 지역신보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 - 소상공인 신규 보증 추가 공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확대 공급
	소상공인 이자경감	- 은행권 자체재원 및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개인사업자 이자 환급 -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 확대 - 소진공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
	재기 및 정상화 지원	-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 성실상환 소상공인 등 신용사면 및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추진 -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 이자감면
PF 사업장·건설사 금융지원	PF사업장 금융지원 강화	- PF사업자보증 공급 규모 확대 - 일시적 유동성 부족 사업장 신규자금 대출 허용
	건설사 PF관련 금융애로 해소	- 시장안정프로그램 재원 활용 부동산PF 관련 건설사 지원 - 부동산PF 대출 관련 이자, 수수료 등 부과실태 점검

자료: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금융위원회, 2024.3.27.)을 바탕으로 재구성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추진 관련 고려사항

-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여건과 건설경기 회복 가능성이 불확실한 가운데, 사업자 폐업 또는 공사 중단이 발생할 경우 모든 손실을 보증기관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규모 확대 및 보증심사 요건 완화 등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보증사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산업예산분석과 김용오 예산분석관(02-6788-4651)

글로벌 녹색산업 육성방안 발표

정부, 「글로벌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발표(2024.2.)

- 정부는 2024년 2월, 예비 그린유니콘 10개, 글로벌 탑 녹색기술 10선, 녹색산업 클러스터 10개소, 녹색투자 30조원, 해외진출 100조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

주요 추진사항

-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의 시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규범의 확대와 세계 각국의 전방위적 탄소중립 정책 채택에 따라 글로벌 기업환경도 변화
  - 탄소중립, ESG가 투자의 핵심 요인으로 자리잡으면서 기업규모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급망 전반의 녹색전환이 요구되는 추세
- 자원 안보의 대안으로서 순환경제 부상
  -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등에 쓰이는 실리콘, 리튬 등 유가금속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용수 수요도 빠르게 증가
  - 환경규제 강화, 코로나19 등으로 심화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순환경제 시장이 안정적 자원 확보 수단으로 주목되며 급성장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중요성 증대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난 대응,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위한 녹색기술 수요가 증대하고 녹색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
  -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면 세계 최고의 녹색기술 개발과 유망기업 육성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연관산업의 녹색전환을 이끌 필요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전략 ① 글로벌 수준 녹색기업 육성

- 창업에서 성장까지 전과정 지원
  - 청년 중심의 창업지원 확대: 혁신 아이디어·기술 보유 기업의 공격적 발굴과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그린스타트업 1,000개사 육성(~'27)
  - 녹색 벤처 중소기업 자금흐름 원활화: 재정융자 및 녹색정책금융 지원 확대, 신규 녹색채권 발행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확대
- 글로벌 수준 유망기업 집중 육성
  - 예비그린유니콘 기업 육성: 미래 유망기업에 사업화 지원, 클러스터 입주, 융자·투자, 홍보컨설팅 등 지원을 집중하여 성과 극대화
  - 유망기업 성장 디딤돌 제공: 담보력 한계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녹색기술 보유 기업에 보증 제공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전략 ② 혁신기술 전략적 확보·사업화

- 글로벌 Top 녹색기술 개발
  - 글로벌 TOP 10 녹색기술 개발 (과기정통부, 산업부, 해수부 등 협업): 기후기술, 폐기물에너지화 등 세계 최고에 근접한 글로벌 TOP 기술 10선을 집중 지원하여 조기 성과 창출 및 경쟁력 확보

[글로벌 TOP 10 녹색기술]

구 분	지원 대상 선도기술 10선
국가 전략 기술	①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
	② 바이오플라스틱 활용 청정수소 생산 기술
	③ 환경보건 생체데이터 구축 및 활용 기술
탄소중립·기후 테크 기술	④ 기후위기 대비 극한 물재해 예방·대응 기술
	⑤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첨단 산업용수 생산 기술
	⑥ 개방형 빅데이터 기반 기후재난 예·경보 및 대응 기술
	⑦ CO2 전환 및 친환경 원료·소재화 기술
순환경제 기술	⑧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및 폐전기· 전자제품 내 유가금속 회수 기술
	⑨ 폐플라스틱 연료·원료화 기술
	⑩ 유해화학물질 대체 물질·소재 기술

자료: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2024.2.26.)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 녹색 혁신기술 성과 확산
  - 유망기술 시장 진출 촉진: 우수기술을 보유한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 진단 및 고도화 지원('24~)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전략 ③ 녹색산업 지역거점 조성

- 지역특화 녹색산업 거점 조성
  - 지역 산업 연계 녹색융합 클러스터 신규 조성: 폐배터리·반도체·태양광 패널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하여 자원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
- 지역연계 녹색산업 성장 모델 제시
  - 녹색융합클러스터와 지역 연계 모델 창출: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인천) 발전 방안을 마련('24)하고 인재 양성·정주여건 개선·시험생산시설 건립 등 녹색 창업기지로 육성
  - 지방시대 녹색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 녹색산업체의 전문·실무인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 특성화고를 지역 특화 수요와 연계하여 재편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전략 ④ 녹색투자 확대·신시장 창출

- 녹색금융·투자 활성화
  - 녹색시장 자금 공급: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채권 발행비용 및 녹색금융지원을 통해 매년 3+2조('24~'27), 총 20조 원을 녹색시장에 공급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 신설('24~'28, 5년간 총 4,000억 원)
- 녹색 신시장 창출
  - 물 재생에너지 연계시장 활성화: 물에너지 공급자와 지역 내 수출기업을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수요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전략 ⑤ 전략적 해외시장 공략

- 해외 환경산업 수요 주도적 발굴
  - 개도국 환경난제 수요 공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및 녹색인프라 수요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관리' 정책 대안 제시 및 협력 프로젝트 발굴

- 녹색전환 기술 수요 대응: 중동 대상으로 탈탄소 대비 녹색전환을 시대적 과제로 하는 대형 녹색 프로젝트 중심 新시장 확대 기조에 대응하여 정부 주도 협력채널 확대

● 해외시장 전략적 공약과 수출성과 극대화

- 핵심 녹색인프라 수주 분야 다각화: 중동·동유럽 위주에서 북미, 아프리카 등 진출지역을 다변화하여 글로벌 TOP K-녹색산업으로 성장 가속화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전략 ⑥ 미래지향 소통 내실화·제도 지원

●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 내실화

- 녹색산업계와 정부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채널 체계화: 기업 간 공동 과제 발굴을 위한 주요 환경산업별 분과위원회 운영,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 소통 추진

● 제도를 통한 녹색시장 활력 제고

- 순환자원 이용 환경 개선: 순환자원 지정·고시제('24.1~), 폐배터리 수거체계 개선('25~), 폐배터리 보관기간 확대(30일→180일 분, '23.5~) 등 안정적 수급 지원
- 녹색투자 증대를 위한 기준 및 인센티브 마련 등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추진시 고려사항

● 환경부는 동 육성방안에 따라 녹색산업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정부 부처간 역할분담·조정 및 긴밀한 연계·협업을 바탕으로 녹색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녹색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체계적·유기적 지원 필요

●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등 녹색·환경 의제에 대한 미국 EU 등의 글로벌 동향 및 추세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동 대책을 차질없이 준비·이행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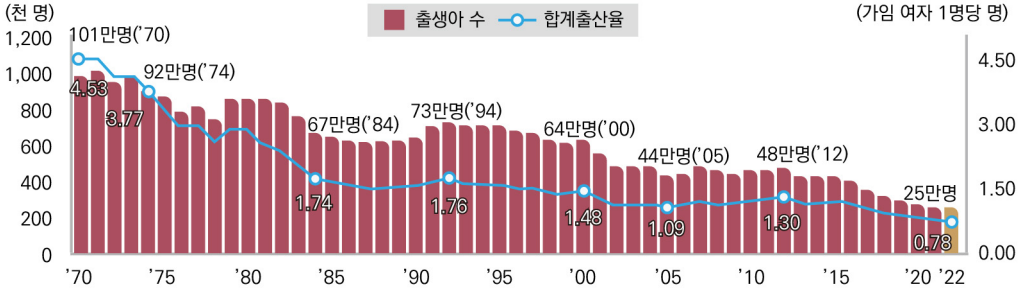
사회예산분석과 이덕형 예산분석관(02-6788-463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 3. 19.)

-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970년 101만 명에서 2022년 25만 명으로 50년간 76만 명 감소(△75.2%), 합계출산율[1)]은 1970년 4.5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이며,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우리나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1970년-2022년



자료: 통계청, 「2022년 출생통계」, 2023.8.30.

-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24.3.19.(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은 인구정책평가센터 위탁 근거 마련, 시행계획 평가완료 시기 명확화(매년 5월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근직으로 변경,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300만 원(기존 200만 원)으로 인상 및 사용기간(1년 → 2년) 확대

  -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즉시 시행('24.3.26),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제4조)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

1)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민간위탁을 통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하여 인구정책 평가, 조사 등 수행
  - (수탁 가능 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사업기간) 계약 체결 시~'24.12.31, (소요예산) 1,000백만원

(참고) 인구정책평가센터

(설치 필요성) 방대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일괄적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과학적 근거 기반 평가·환류 강화
※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23.3.28.)」 발표 시 인구정책평가센터 설치 등 정책 평가-환류 체계 강화 방안을 포함

(주요 수행 업무) ① 시행계획 평가, ② 심층평가, ③ 장기전망 및 대응전략 수립, ④ 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 ⑤ 국민인식 기반 정책발굴 등의 조사·연구 업무 수행

구 분	기 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수행)	개 선 (인구정책평가센터 수행)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연구용역 활용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의 자체 평가 결과를 기초로 정합성 검토 등 거쳐 확정 ※ 대상 과제가 방대하고 인력 부족으로 기관 평가 결과 단순 취합 수준에 불과	▸시행계획 상 성과지표 성과(outcome) 중심으로 개편 ▸개선방안, 예산 관련 의견 도출
심층평가	(신 설) *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	▸대상 사업 발굴 및 중장기 심층평가 수행 - 정책효과성 및 예산효율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 수행 ▸개선방안, 예산 관련 의견 도출
장기전망 및 대응 전략 수립	(신 설)	▸미래 사회·경제환경 변화 전망 및 대응전략 수립 ▸시뮬레이션 기반 정책 개입 영향 등 분석
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	(신 설)	▸인구정책 주요지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관 간 데이터 연계하여 지표 개발·생산 ▸세부지표 모니터링 실시 및 수시 평가 - 계층별, 지역별 분석 등 수시 실시하여 정책 작동 과정의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제시
국민인식 기반 정책발굴	▸연구용역 활용,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인식조사 실시	▸FGI, 인식·실태조사 등 국민인식조사 실시 ▸정책 수요 반영 아젠다 발굴

자료: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3.19.

- 내년 정부 예산 편성(6월~)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하여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관련 시기 조정

구분	평가지침 수립		자체평가 완료		평가완료
기존	-	⇨	3월 말	⇨	-
개정	1월 15일		2월 말		5월 31일

자료: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3.19.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변경
-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
  - 정부위원(8개 정부부처의 장) :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장관 + 법제처장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좌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을 포함
  - 운영위원회 위원(10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차관 + 법제처 차장

● 첫만남이용권 지급 확대 및 운영 편의성 제고

- 그간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 원을 지급
  - ('23) 233천명, 319,241백만원 → ('24) 234천명 + 둘째아 이상 출생아 87천명, 380,183백만원 (60,942백만원, 19.1% 증가)
-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

(참고) 첫만남이용권

(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국가책임 강화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금액 및 방식) 첫째아 200만,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지급

(사용처) 유흥업소·사행 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고려, 지나친 제한 지양

(지원기간)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전달체계)

읍·면·동		시·군·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군·구
신청·접수	⇨	지원결정	⇨	바우처 생성·관리	⇨	대상자 관리

자료: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3.1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추진 시 고려사항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상근직 변경에 따른 조직 내실화 및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업무 추진 시 관련 부처 간 협업 체계 강화 필요
-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평가 고도화 및 환류 강화를 통한 인구정책 효과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평가 수행을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를 고도화하고 심층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인구정책의 효과성 비교·검증 필요
  - 인구정책 모니터링 및 국민인식조사 실시 등을 통해 시의적절한 정책 수요 발굴 필요
  - 미래 사회·경제 환경 전망에 근거한 중·장기전망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체감도 높은 인구정책 수립 필요

사회예산분석과 허아름 예산분석관(02-6788-3728)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2023년도(FY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초로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분석·평가한 것으로, 인구·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13개 유형으로 구분한 후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3개 분야의 13개 평가지표를 활용함.
  - 재정건전성: 수지 및 채무관리, 공기업관리 등 건전재정 원칙에 입각한 재정상태의 건전성 평가
  - 재정효율성: 재원조달 및 재정지출 효과 측면에서 세입과 지출관리의 효율성 평가
  - 재정계획성: 중기재정계획 이행,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평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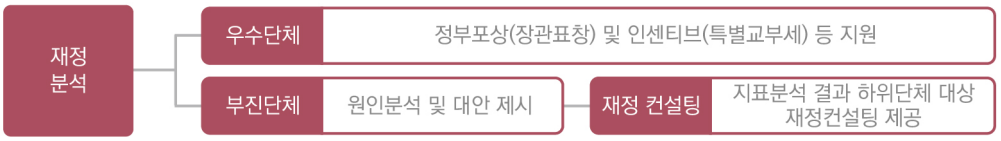
분 야	세부지표(14개)
건전성 (6개)	• (수지관리) ① 통합재정수지비율 ② 경상수지비율 • (채무관리) ③ 관리채무비율(증감률), ④ 관리채무상환비율, ⑤ 통합유동부채비율 • (공기업관리) ⑥ 공기업부채비율
효율성 (6개)	• (세입관리) ⑦ 자체수입비율(증감률), ⑧ 지방세징수율(제고율), ⑨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 (세출관리) ⑩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⑪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⑫ 자체경비비율(증감률)
계획성 (2개)	• (재정계획) ⑬ 세수오차비율(개선도) • (재정집행) ⑭ 이·불용액비율

참고 지방재정분석제도

(개념)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재정분석 실시 후, 결과 및 유사단체별 재정비교표를 작성 및 활용하는 재정관리 수단
(평가방식)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재정여건 기준으로 13개 집단으로 묶어 집단 내 상대평가

* 자치단체 유형분류 기준	**(인구)** ① 인구규모(30%), ② 인구증감률(8%), ③ 고령인구비율(7%), ④ 조출생률(5%) **(재정)** ① 재정력지수(30%), ② 세출규모(8%), ③ 사회복지비비율(7%), ④ 자치단체 면접(5%)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제57조 / 동법 시행령 제65조~제65조의4
(결과활용) 우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부진단체 대상 재정진단 혹은 재정컨설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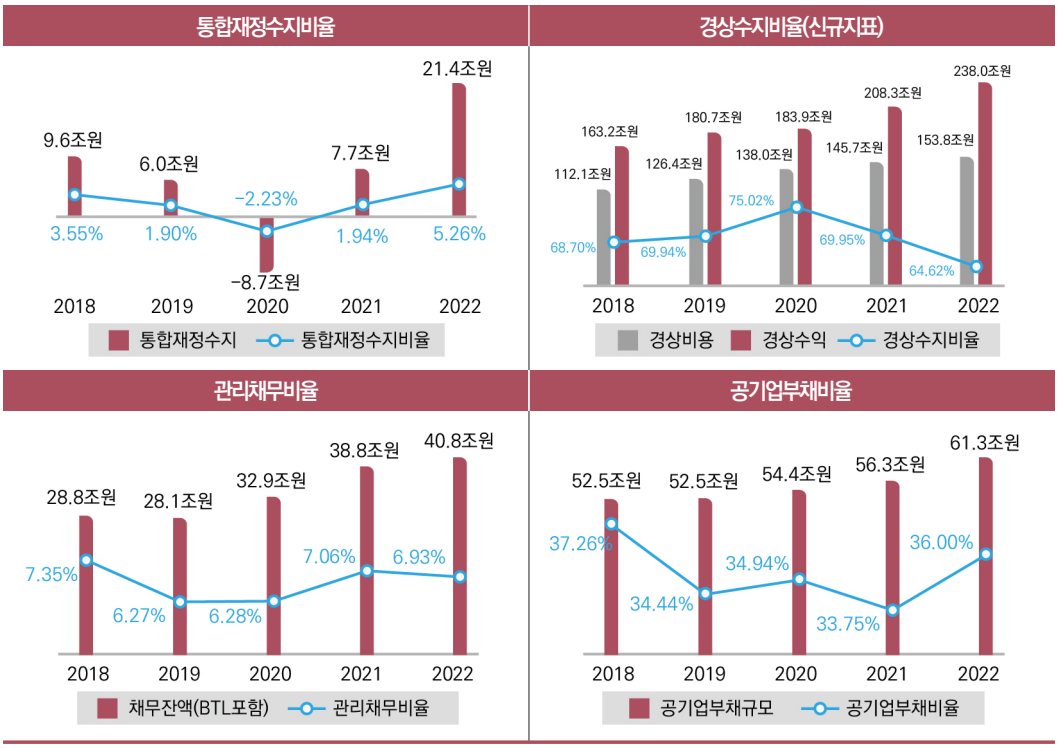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건전성 분야

- 재정건전성 분석 결과, 통합재정수지와 경상수지비율 및 관리채무비율 모두 개선되었으나, 채무 규모는 증가 추세로 나타나며 공기업부채비율 역시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경상수지비율은 2022년 지방교부세 증가('20년 50.3조원→'21년 59.2조원→'22년 81.0조원) 등에 따른 세입 증가로 전년 대비 개선(3.32%p, △5.33%p)
  - 채무잔액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2.0조원↑)했으나 세입 확대로 관리채무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0.13%p)
  - 공기업부채비율은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공사채 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25%p 상승

재정건전성 분야 주요지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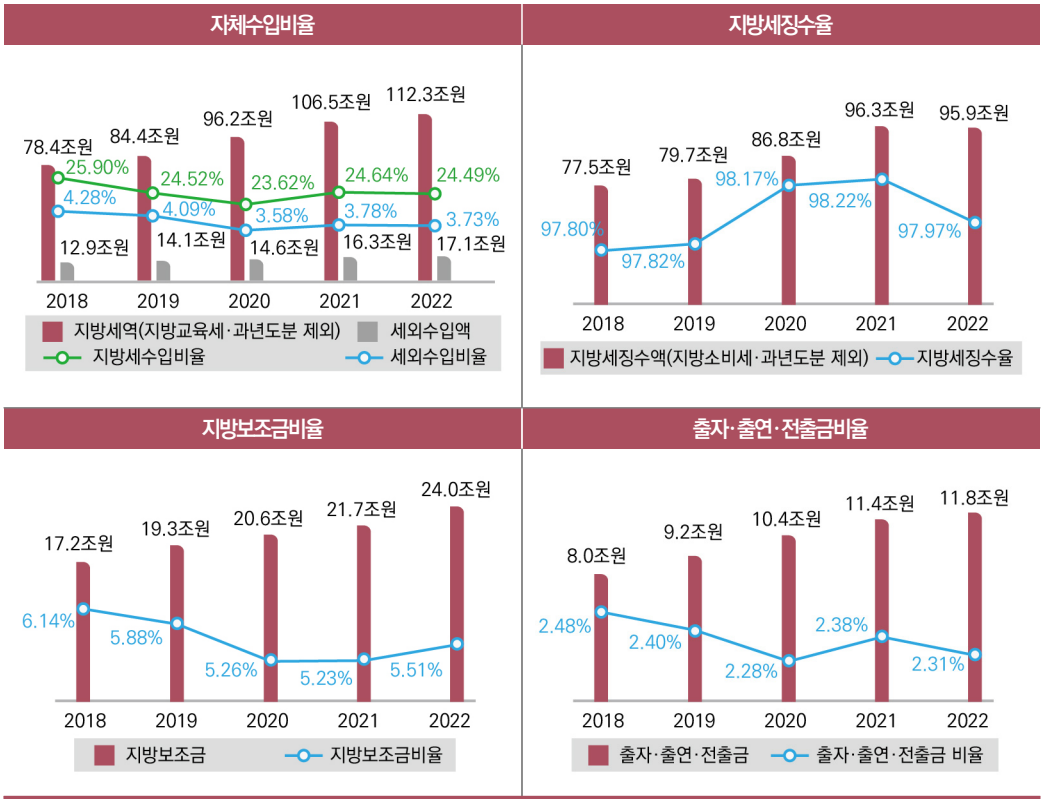
주: 1.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상향지표로서 지표값이 높을수록 양호하다고 판단하며,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은 하향지표로서 지표값이 낮을수록 양호한 것으로 판단 가능
2. 통합재정수지비율(%) = [수입-(지출+순융자)} / (지출+순융자)]×100
3. 경상재정수지비율(%) =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4. 관리채무비율(%) = [지방채무잔액(BTL지급잔액포함) / 세입결산액] × 100
5. 공기업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효율성 분야

- 재정효율성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징수관리 측면에서 자체수입비율, 지방세징수율 모두 전년 대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남
  - 자체수입비율은 취득세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0.20%p), 지역경기침체에 의한 담세력 약화로 지방세징수율 및 체납관리비율도 전년 대비 미흡한 수준(△0.25%p)
- 복지·환경분야 보조사업 증가로 지방보조금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은 감소
  - 지방보조금은 민간경상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위주로 전년 대비 규모 증가(0.28%p),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전출금이 신규 재단 설립, 공기업특별자본전출금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출자금이 출자법인 수익성 개선 등에 따라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소폭 감소(△0.07%p)

재정효율성 분야 주요지표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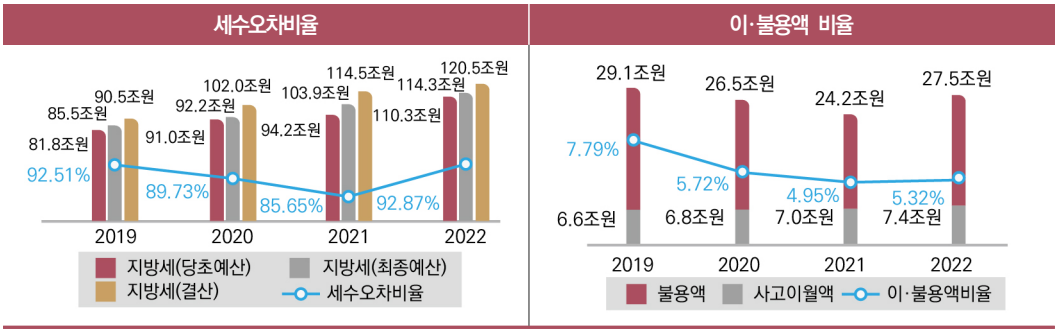
주: 1. 자체수입비율은 상향지표로 세입결산액 대비 비율, 지방보조금 및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하향지표로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
2. 지방세징수율(%)은 상향지표로 산정방식은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100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계획성 분야

- 재정계획성 분석 결과, 세수오차 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이·불용액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집행실적 제고 노력 필요
  - 세수오차비율은 92.87%를 나타내 오차율 축소로 전년 대비 개선(△7.22%p)되었으나, 이·불용액비율은 5.32% 수준으로 전년 대비 0.37%p 증가하여 계획 대비 집행실적 미흡

2023년 지방재정분석 주요 결과(재정계획성 분야)



주: 1. 세수오차비율은 100%에 가까울수록 양호하며, 이·불용액비율은 지표의 값이 낮을수록 양호함
2. 세수오차비율(%) = [(지방세 당초예산액+지방세 최종예산액)×0.5 / 지방세 세입결산액]×100
3. 이·불용액비율(%) = [(사고이월액+불용액) / 세입결산액]×100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추진 시 고려사항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14개 지표 중 7개 지표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이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로 이는 예상치 못한 세입 증가(특히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증가) 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며, 자치단체의 노력이 수반되는 효율성 분야 5개 지표와 공기업부채비율, 이·불용액비율은 전년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부터 경기하강·기업실적 악화 및 세수결손으로 수지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재정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경상경비 절감 등 가용재원 지속 확보 및 지방보조금, 출연·출자·전출금 관리 강화 등 효율성 개선 노력 필요

- 특히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지방채 발행유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사업 등으로 채무잔액 및 유동부채 모두 증가했으므로 우발채무를 포함하여 분기별 채무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 채무관리가 필요하며, 낮은 요금현실화율,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라 지방공기업·공사의 부채 역시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채감소 및 경영실적 개선 노력 필요

행정예산분석과 박은형 예산분석관(02-6788-464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행안부·기재부·산업은행,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발표(2024. 3. 26.)

- (개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1)]
  - '24년은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2)], 산업은행에서 각각 1천억원씩 출자하여 총 3천억원 규모의 모(母)펀드 조성
  - 지자체와 민간을 주축으로 자(子)펀드를 결성하고,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3)]을 설립하는 등,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에 투자

- (추진배경) 중앙정부에 의존하였던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빠른 속도로 안정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 대두
  -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중앙정부가 지역에 투자한 연간 재정규모[4)]는 약 91조원이 증가(239조원 → 330조원, 연 평균 증가율 13.4%)하였음에도 지역 활성화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민간자금과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도입,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

1) 관계부처 합동,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지자체·민간 주도의 지역개발 박차", 보도자료, 2024.3.26.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금
3) 특수목적법인(SPC): 업체의 신용보다는 특정 사업의 사업성이나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지자체, 민간시행사, 건설사, 민간금융기관 등으로 구성
4) 최종 통합재정지출 기준. 관계부처 합동,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보도자료, 2013.7.12.

운영체계

- (근거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일부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업선정절차) 펀드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순서로 선정됨
  - 첫째,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지역개발 사업을 발굴·제출
  - 둘째,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선정한 후 해당 사업에 대한 펀드 투자신청

    ※ 제외사업: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사업, 향락시설이나 법률분쟁 중인 사업, 상업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 대한 분양·매각 매출 합계가 총사업비의 50% 이상인 사업 등
  - 셋째,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가 신청·접수된 사업 중 동 펀드로 투자할 사업을 심사·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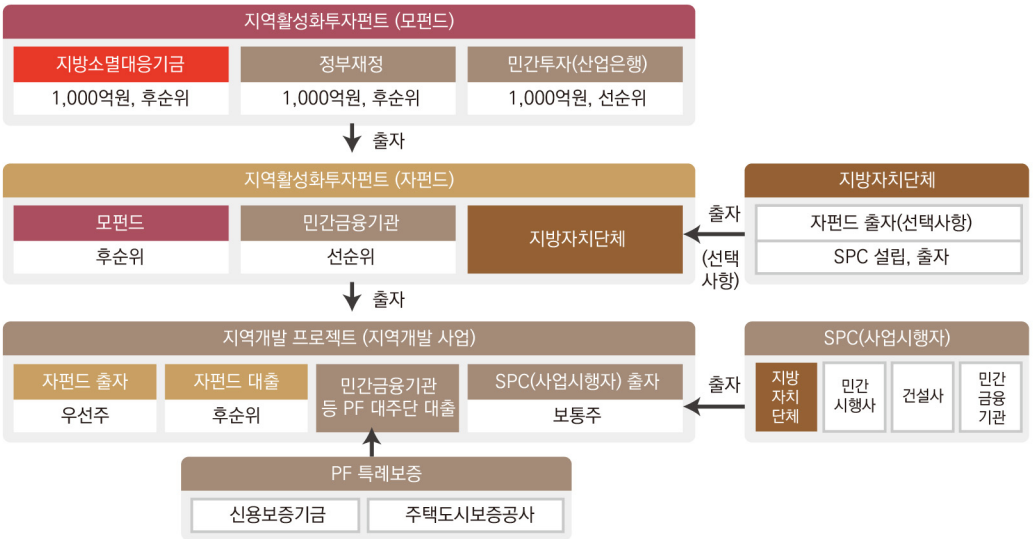
- (수익 배분) 펀드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모펀드에 출자한 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고, 배분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재배분

펀드 운용구조

- (모펀드→자펀드 출자) 광역시 프로젝트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 프로젝트는 50%까지 출자 가능(지자체도 원하는 경우 자펀드로 출자가 가능)
- (자펀드→지역개발 사업 투자)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투자 가능
- (SPC 설립 및 운영) 지자체·민간시행사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SPC에 투자
- (PF[5]대출 특례 보증)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SPC에 대하여 보증을 섬으로써, 사고 발생 시 PF대출 분에 대한 대위변제[6] 실시

5)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 현금흐름(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6) 대위변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운용구조



자료: 류영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출자",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4. 2. 29.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방안

- (개념)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시의성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심사나 SPC 설립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

- (재정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행안부 재정투자심사 등으로 약 9개월 소요 → 절차 간소화
  -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수익성, 사업성 등 검증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심사 면제 Track'이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전용 Fast-Track'을 운영
    - 투자심사 면제 Track: 사업 타당성 등이 월등하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장관급 회의체 의결 등을 통하여 재정투자심사 면제
    - 전용 Fast-Track: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소요 기간 단축, 투자심사 수시 개최 등을 통해 최소 4~5개월까지 소요 기간 단축

- (특수목적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SPC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자체 절차, 행안부의 사전협의,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등으로 인해 약 9개월 소요 → 신속심사를 통한 소요기간 5개월 이하로 단축
  - 행안부 사전협의 신속화, 타당성 검토 간소화, 수시 컨설팅 등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박승민 예산분석관(02-6788-3740)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발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발표(2024. 2. 29.)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유·무상 분야별 시행계획을 조정·심사하여 매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함
  - 2024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의결('23.6.30.) 이후 정부가 편성·제출하였으며, 국회가 의결('23.12.21.)한 예산을 반영하여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을 확정 추진함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수립경과

절차	구분	시기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 검토 요청	주관기관 → 각 부처	2023.1
시행기관 대상 수립지침 안내	주관기관	2023.2
기관별 시행계획 주관기관에 제출	시행기관	2023.3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외교부	2023.5.3
분야별 시행계획(안) 제출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2023.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3.5.25
유상·무상 사업 종합 심사·조정	국무조정실	2023.6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의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3.6.30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각 부처	2023.9.1
국회 본회의 의결	국회	2023.12.21
2024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심의	실무위원회	2024.2.21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4.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4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 2024년 ODA 사업 예산 규모는 6조 2,629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858억원(31.1%) 증가하였으며, 이 중 양자간 원조는 5조 1,282억원(유상원조 2조 320억원, 무상원조 3조 962억원), 다자간 원조는 1조 1,347억원임

유형별 ODA 사업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A)	2024(B)	증감	
				B-A	(B-A)/A
총 ODA (a+b)	39,383	47,771	62,629	14,858	31.1
- 양자 (a)	31,157	36,739	51,282	14,543	39.6
유상원조	12,305	15,030	20,320	5,290	35.2
무상원조	18,852	21,709	30,962	9,253	42.6
- 다자 (b)	8,226	11,032	11,347	315	2.9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4.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4년도 ODA 사업의 부처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가 2조 5,706억원(43.5%)으로 가장 비중이 크며, 외교부 2조 5,032억원(41.9%), 농림축산식품부 1,832억원(3.1%), 교육부 1,331억원(2.2%), 산업통상자원부 969억원(1.6%) 등의 순임

부처별 ODA 사업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A)	2024(B)	증감	
				B-A	(B-A)/A
총ODA	36,551	42,289	59,792	17,502	41.4
기획재정부(본부)	2,756	2,880	5,386	2,506	87.0
EDCF	13,334	15,030	20,320	5,290	35.2
외교부(본부)	5,358	7,001	12,053	5,052	72.1
KOICA	9,103	10,618	12,979	2,361	22.2
농림축산식품부	1,053	1,101	1,832	731	66.4
교육부(본부)	932	1049	1299	250	23.8
교육청	17	24	32	8	33.3
산업통상자원부	699	706	969	263	37.2
보건복지부	620	663	868	205	30.9
국무조정실	101	111	120	8	7.4
지방자치단체	62	61	75	14	23.0
기타	2,516	3,045	3,859	814	26.7

주: 1. 사업예산 규모는 ODA 계상비율에 따라서 ODA로 인정되는 액수만 포함
2. 양자협력 중 유상협력은 EDCF(수출입은행)에서만 시행(2조 320억원)
3. '24년 다자협력 중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285억원, 양허성기금 중 2,552억원은 ODA 총규모에는 포함되나, 기관별 사업예산에는 미포함 (단, 아시아개발은행(ADB),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양허성기금은 사업예산에 포함)
4. '22년 44개(지자체 11개 포함), '23년 45개(지자체 12개 포함), '24년 46개(지자체 12개 포함) 기관이 참여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4.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4년 기준 46개 시행기관이 1,97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EDCF(한국수출입은행)와 KOICA 외에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ODA 사업을 수행함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무상원조 중 인도적 지원(’23년 2,994억원 → ‘24년 7,401억원)과 유상원조 중 국제금융기구 출연(’23년 1,593억원 → ‘24년 3,451억원) 등이 있음

2024년 ODA 시행기관별 주요 사업 현황

(단위: 개)

시행부처(기관)	사업수	사업명
합계(46개)	1,976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포함)	36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인도 녹색성장 섹터전환 퍼실리티(ADB 협조융자) 등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포함)	883	국제기구분담금 및 인도적지원, 국별협력사업, 해외봉사단, 글로벌연수 등
농림축산식품부	65	국제농업협력사업(ODA) 등
교육부	107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 등
산업통상자원부	57	산업 및 에너지협력개발지원(ODA) 등
보건복지부	51	의료기기 관리체계 개선,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국무조정실	16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등
지방자치단체(12개)	26	개도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등
기타	404	지능형 교통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등

주: 총 46개 기관(지자체 12개 포함)이 참여하였음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4.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추진시 고려사항

- 우리나라 ODA 예산 규모는 매년 확대(특히, 24년도에는 전년 대비 31% 증가)되어 왔으나,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의 ODA/GNI 비율*과 ODA 사업의 비효율과 저성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019~2024년 동안 지속적으로 ODA 예산 규모가 증가해 왔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4.4%임

    * ’22년 우리 ODA 총규모는 28.1억달러(31개 회원국 중 15위), ODA/GNI는 0.17%(29위)임

2019~2024년 ODA 예산 규모 및 전년 대비 증가율

(단위: 십억원,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19~2024년 연평균 증가율
3200.3	3427.0 (7.1)	3754.3 (9.6)	3938.3 (4.9)	4777.1 (21.3)	6262.9 (31.1)	14.4

주: ( )의 값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4.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ODA 규모에 있어서 공적재원 확충은 재정여력을 고려한 중·장기적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보다 앞서 민·관 재원 융합 등 재원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재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민·관 융합재원은 대규모 인프라 수요가 많은 중소득국에, 공적재원은 저소득국·최빈국에 지원하는 방안 등 재원배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
- ODA 추진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하여 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에 집중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행정예산분석과 우형규 예산분석관(02-6788-4643)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발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심의·확정(2024.3.28.)

- 정부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

  **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은 2022년 수립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3~2045)」의 목표와 추진방향 이행을 위한 2024년도의 구체적 실행계획

- 정부는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5대 임무에 전년 대비 10.1%(910억원) 증가한 9,923억원을 투자할 계획
  - (우주탐사) (가칭)「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2032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달 탐사 2단계 사업 착수 등('24년 356억원)
  - (우주수송)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해 차세대발사체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설계·개발,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 구축 착수 등('24년 2,221억원)
  - (우주산업)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체제 구축 착수, 국내 소자·부품 분야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누리호 활용 우주검증 등('24년 5,495억원)
  - (우주안보)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 발사, 중·고궤도용 광학시스템 구축 등 ('24년 1,606억원)
  - (우주과학) 국제공동 블랙홀 관측 프로젝트 참여, 태양코로나 그래프 발사 등 ('24년 245억원)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예산 개요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주요 내용	2023 (A)	2024 (B)	증감	
				(B-A)	(B-A)/A
우주탐사 확대	달 탐사 2단계 사업 등 11개 사업	15,442	35,568	20,126	130.3
우주수송 완성	차세대발사체 개발 등 7개 사업	141,291	222,094	80,803	57.2
우주산업 창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53개 사업	621,568	549,526	△72,042	△11.6
우주안보 확립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 등 19개 사업	91,864	160,618	68,754	74.8
우주과학 확장	국제공동 블랙홀 관측 등 32개 사업	31,136	24,510	△6,626	△21.3
합계		901,301	992,316	91,015	10.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5대 임무별 추진계획

- [임무 1. 우주탐사]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달 탐사 착수 등
  - (우주탐사 로드맵) 달을 넘어 화성·소행성 등 미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담은 (가칭)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 (달 착륙선) 다누리에 이어 '32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 탐사 2단계 사업 착수
  - (탐사 협력) 우주탐사 선도국으로의 신속 진입을 위해 美 아르테미스 참여 확대 지속 추진
- [임무 2. 우주수송] 차세대발사체 개발 본격 추진 등
  - (발사체)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해 차세대발사체 100톤급 엔진·설계·개발 본격 추진, 한국형발사체 4차 발사('25)를 위한 체계 총조립 착수

    ※ 차세대발사체는 민간 체계종합기업 선정으로 항우연-민간기업이 발사체 공동 개발
  - (발사장) 민간 발사체 발사 지원을 위한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 구축 착수(나로우주센터 내)
- [임무 3. 우주산업]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본격 착수 등
  - (산업 거점)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체제 구축」 본격 착수

    ※ 발사체 전남(민간 발사장), 위성 경남(우주환경시험시설), 연구·인재개발 대전(우주인력양성센터)
  - (위성개발) 차세대 중형위성·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예비 설계 등
  - (위성정보활용) 민간 위성정보활용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위성정보공개 확대 및 활용기반 구축
  - (부품자립) 국내 소자·부품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우주검증 지원 착수('24년 8개)
- [임무 4. 우주안보]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 발사 등
  - (우주자산) 초소형군집위성 시제기 발사 등 한반도 정밀·상시 감찰을 위한 우주자산 개발 가속화
  - (재난재해) 우주물체 충돌·추락 대응 등 중·고궤도용 광학시스템 및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구축, 태풍·집중호우·산불 등에 대한 선제적 위성 정보 제공
  - (우주외교) 양자·다자 우주외교의 외연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국제공동연구 참여 등
- [임무 5. 우주과학] 태양코로나그래프의 국제우주정거장 설치 등
  - (블랙홀) 한국우주전파관측망 전파망원경 활용 국제공동 블랙홀 관측 프로젝트(EHT*) 참여

    * Event Horizon Telescope,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 (우주환경) NASA-천문연 공동 프로젝트인 태양코로나그래프발사 및 국제우주정거장 설치

우주항공청 중심의 새로운 우주개발 거버넌스 구축과 효과적인 우주개발진흥 사업 추진

-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출범에 대응하여 새로운 우주개발 거버넌스 구축과 우주항공청 중심의 효과적인 우주개발진흥 사업의 추진이 필요
  -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4.1.9) 이후 현재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중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질없는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를 통해 우주항공청 중심의 새로운 우주개발 거버넌스 구축과 효과적인 우주개발진흥 사업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

    **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하위 법령 마련, 조직·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부처·출연연 사업 이관 등
- 민간 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우주 산업체 육성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2024년 신규 사업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사업*'이 착수되어, 기본계획 수립, 사업단 출범, 인프라 기본설계 등이 추진되면서, 민간 주도 우주산업 성장 기반이 마련될 예정

    * 총 사업기간 / 총사업비: 2024.1.~2031.12. / 6,161억원(과기부 4,994억원, 지방비 1,166억원, 민자 1.5억원)
  - 다만, 우주산업 분야 주요 R&D사업과 산업체 지원 사업의 2024년 예산 감소**를 고려하여, 우주 산업체 육성을 위한 우주펀드 투자 확대, 조달방식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효과적인 사업지원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우주산업 주요 사업('24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스페이스챌린지사업(43억원, △69%), 스페이스이노베이션(8억원, △81%),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276억원, △16%),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22억원, △77%),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지원체계 개발(42억원, △50%)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이병철 예산분석관(02-6788-4841)

바이오제조 혁신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제조 혁신전략」 발표(2024.4.1.)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발표한 「바이오경제 2.0」(2023.7)에 따른 바이오제조 5대 미션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제조 혁신전략」(2024.4.1.)을 발표
  - 「바이오경제 2.0」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 확보, 바이오신소재산업 육성,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상용화,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

    ※ 바이오 경제는 바이오 자원에 기반한 공정·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경제·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경제 구조
- 「바이오제조 혁신전략」은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을 비전으로 하며, 2030년까지 바이오의약품 생산 15조원, 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제시
  - 「바이오제조 혁신전략」에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4대 혁신전략으로 ①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 확보, ② 글로벌 바이오소부장 스타 양성, ③ 글로벌 생산허브 도약기반 마련, ④ 바이오의약품 경제영토 확장을 제시

「바이오제조 혁신전략」의 4대 혁신전략

4대 혁신전략	주요 추진방향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 확보	① 17.7조원 규모 민간투자 지원, ②한국판 BioMADE축
글로벌 바이오소부장 스타 양성	① Two트랙(국산화·글로벌협력) 지원, ②4단계(R&D-투자-실증-공급망진출) 지원
글로벌 생산허브 도약기반 마련	① 산학연병 생태계 조성, ② 산학연 연계 인재 보급고 마련
바이오의약품 경제영토 확장	① 민간협력 바탕으로 수출확대, ② 통상협력으로 뒷받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4.1.)를 바탕으로 작성

추진배경

- 바이오산업은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팬데믹·고령화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시장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바이오의약품이 보건안보 필수자산으로 인식되어 전세계적으로 안정적인 바이오제조 및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은 바이오기술·제조 범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명령 「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발동(2022.9)
- 중국은 「중국제조 2025」 10대 핵심산업에 바이오를 포함하고, 2035 바이오굴기를 선언하여 바이오 생산설비·공급망 확보 추진
- 영국은 차세대 모달리티(약물전달체) 개발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해 MMIC(Medicines Manufacturing Innovation Centre) 설치

●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을 확보하였으나 인력, 소부장 등 제조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으로 글로벌 바이오제조 능력 경쟁 심화에 대응한 제조역량 강화 필요

- 바이오의약품 CMO(2021년 기준): 1위 미국(48.6만ℓ)→2위 한국(38.5만ℓ)→3위 독일(24.6만ℓ)

※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전문 생산 조직

「바이오제조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

● 혁신전략 ①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 확보

- 정책금융 공급, 실증기반구축, 선제적 규제완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예정된 17.7조원(바이오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바이오소부장) 규모 민간 시설투자 지원

※ 국책은행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2024년 4.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신용보증기금 2.1조, 산업은행 1.4조, 기업은행 0.7조)

- 국제기관과 바이오 초격차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R&D 추진 등을 통한 「한국판 BioMADE」(바이오제조혁신플랫폼), 국가 바이오파운드리(2025~2029), 디지털기반 의약품 제조혁신센터 구축 등으로 바이오의약품 개발공정의 디지털전환과 생산공정 고도화 지원

※ BioMADE(Bioindustrial Manufacturing and Design Ecosystem): 미국 국방부 산하 합성생물제조 연구기관

● 혁신전략 ② 글로벌 바이오소부장 스타 양성

- 바이오 핵심원료·부자재·장비 등 80개 핵심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총 3천억원을 지원하여 2030년 국산화율 15% 달성을 위한 단계적 기술개발 추진

※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단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품목 우선 개발, 미래선도 바이오소부장은 중장기 지원

- 바이오소부장 기업의 수요 연계 지원, 규제혁신, R&D 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소부장 분야의 민간 투자 및 사업화 촉진

※ 기반강화기(2020~2023)에 1,000억원 규모 정부 R&D 투자 → 경쟁력축적기(2024~2030)에 1조원 규모 민간 시설투자 유인

※ 지원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 주요 바이오기업 등을 활용한 바이오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트랙레코드 확보 및 국산 바이오소부장 R&D·실증·양산 연계, 양산성능평가 지원

- 핵심전략기술 분야 역량·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하여 R&D·실증·글로벌 진출 지원, 바이오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 구축

※ 핵심전략기술 분야에는 2024년 4월 현재 첨단바이오의약품, mRNA백신 관련 소재기술 등 5개 핵심전략기술 포함, 향후 항체약물접합체(ADC) 원료 등으로 핵심전략기술 분야 확대 및 R&D 지원 추진

※ 으뜸기업은 산업 밸류체인에 필수적인 핵심전략 기술분야에서 잠재역량을 갖추어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

「바이오제조 혁신전략」의 4대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

4대 혁신전략	지원 분야	주요 정부 지원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 확보	① 투자	‣ 국책은행을 통해 2024년 4.2조원 정책금융 공급 ‣ 백신실증지원센터 지원범위 확대 및 규제 완화
	② 공정	‣ 국제기관과의 R&D 협력을 통한 바이오제조혁신플랫폼 구축 ‣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2024~2029)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를 위한 시설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
글로벌 바이오소부장 스타 양성	① R&D	‣ 2030년 국산화율 15% 달성을 위한 단계적 기술개발 지원 ‣ 바이오 핵심원료·부자재·장비 등 80개 핵심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2030년까지 총 3천억원 지원)
	② 투자 및 실증	‣ 바이오소부장 민간투자 밀착 지원(3세대 배지, 바이러스 벡터 등 신규 바이오소부장 R&D지원 등) ‣ 데모플랜트 스케일의 실증 플랜트 사업 추진
	③ 공급망	‣ 핵심전략기술 분야 역량·성장성을 보유한 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 바이오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동향 수시 모니터링
글로벌 생산허브 도약기반 마련	① 성장기반	‣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2024년 상반기) 및 「바이오 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 마련
	② 인력양성	‣ 민간주도 인력양성 체계 바이오아카데미 설립 추진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완공(2025년)을 통해 연 2천명 규모 공정인력 양성
바이오의약품 경제영토 확장	① 수출	‣ 현지 KOTRA 무역관 내 「K-바이오 데스크」 설치 ‣ 한국바이오협회 내 수출투자 애로 상담 전담부서 운영
	② 협력기반	‣ 정부 간 바이오 분야 채널을 통해 민간 협력 확대 ‣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E),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을 활용한 국제협력 강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4.1.)를 바탕으로 작성

- 혁신전략 ③글로벌 생산허브 도약기반 마련
  -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2024년 상반기) 및 「바이오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정부·협회·산업체·대학·병원 등 다양한 산업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민간주도 인력양성 체계인 바이오아카데미 설립, 바이오 특성화대학원 설치 등으로 산학연 바이오인재 보급고 구축

    ※ 바이오아카데미를 통해 바이오 유전체 데이터 분석, 최신 바이오 공정 개발, AI 기반 SW 활용법 등 교육
  - 산업현장과 연계한 공정 실습시설 구축 등을 통해 바이오제조에 필요한 공정인력 양성

    ※ 2025년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완공하여 年 2천명 규모의 공정인력 양성
- 혁신전략 ④바이오의약품 경제영토 확장
  - 현지 KOTRA 무역관 내 「K-바이오 데스크」 설치, 한국바이오협회 내 수출투자 애로 상담 전담부서 운영 및 지역 소재 중소 바이오기업 대상 수출상담회를 분기별 개최 등으로 수출애로해소 및 경제영토 확장

    ※ 주요국 코트라 무역관 내에 7개소(북미 유럽 등 주력4국, 중동 등 신흥3국) 신규 설치 후 확대

바이오제조 혁신전략 이행 시 고려사항

- 바이오제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유인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추어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 규제완화 및 인력양성 등 관련 사업 관리 필요

산업예산분석과 윤성식 예산분석관(02-6788-4666)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4대 혁신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 발표(2024.1.18.)

- (추진배경) 투자 증가율·생산가능 인구 감소 및 총요소 생산성 성장 둔화 등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필요
  - 고탄소제품의 시장 진입장벽 가시화,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중국산업의 기술력 급성장, 높은 대외무역 의존도 등 대외 경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신 이니셔티브 필요
  - 반면에 현재 정부의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시스템은 선택과 집중을 위한 R&D 투자 전략성 미흡, R&D 성과와 기술혁신의 연계 부족, 폐쇄적 네트워크 중심의 R&D 수행체계 등으로 인해 임팩트 있는 성과창출에 한계
- (기본방향) 산업·에너지 기술개발을 고위험·차세대·대형과제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업의 현금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수행의 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① 보조금 성격의 연구개발 지원을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에 지원을 집중하여, 고난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1%('23년) → 10%('28년)로 확대
  - ②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으로 사업체계 개편, ③ 수요자 중심의 R&D 프로세스 전환, ④ 미래세대 중심의 세계적 연구자 양성을 위한 인력 투자 강화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 주요 내용

- (투자전략)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집중 지원
  - 관행적·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중단하고, 글로벌 최고에 도전하는 기술 집중 지원

    ※ 11대 분야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예산의 70%를 배정해 민관 합동으로 약 2조원(정부 1.3조원) 투자

    ※ 10대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에 약 1조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초고난도 과제들에 매년 신규예산의 10%(약 1,200억원 수준) 투자
  - 글로벌 최고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역량이 높은 기업에 우선 지원

    ※ 민관 합동 총 2.4조원 규모의 CVC(기업형벤처캐피털) 펀드를 조성하여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에 집중 투자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를 신설하여 4년간 3,900억원('24년 900억원) 규모 초저금리(1.84%) 지원

-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한시적(~'24.12월)으로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

  ※ (중소기업) 50 → 60%, (중견기업) 40 → 50%, (대기업) 25 → 35%

● (사업구조) 시장 성과 극대화를 위한 R&D 체계로 개편

- 분절된 소규모 요소기술 개발 과제를 지양하고 미션이 명확한 대형 장기투자 체계로 재편

  ※ 미션 중심으로 유사목적 사업들을 통합('23년 280개 → '24년 230개)하고, 100억원 이상 목표지향형 대형과제 확대('23년 57개 → '24년 160개)

  ※ 부처 자율 과제기획이 가능한 프로그램형 사업의 비중을 확대('23년 58% → '24년 71.8%)하고 연 3회 공고를 통한 상시지원 강화

- 수행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부담분의 현금비율을 대폭 인하*하고, 기술보호를 위한 과제 정보의 비공개 조치, 성실집행 기업(연구기관)에 대한 자체정산 허용

  * 현금부담 비율 인하: (대기업) 60 → 15%, (중견기업) 50 → 13%, (중소기업) 40 → 10%

- 국내외 모든 연구자에게 R&D를 개방하고,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 6곳에 협력센터를 구축하여 공동연구 집중 지원

  ※ 국제협력이 필요한 원천기술(초격차 급소기술 80개, 차세대 원천기술 100개 등) 은 전략적 공동연구 추진

● (프로세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 개편

- 정부가 기술을 지정해온 기존 R&D방식을 탈피하여 정부는 원칙적으로 품목과 목표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이 기술내용과 개발계획을 제시하여 경쟁하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무기명 Peer Review를 통해 과제 검증 및 기획의 고도화 추진

-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Cascading 방식*의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하고, 주관기관이 주도하여 공동 연구기관을 구성하고 연구비를 배분하는 유연한 수행 지원

  * (일반과제) 컨소시엄(주관+공동연구기관)을 선정·협약, 협약에 따라 기관별 연구 수행
    (Cascading) 주관기관만 선정·협약, 주관기관 주도로 과제 수행

- 시장·산업전문가 등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 방식도 확대**하는 등 도전성·혁신성·시장성 검증을 강화

  * 과제선정 평가시 시장·산업 전문가의 참여의무를 기존 2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

  ** '23년 소재·부품·장비분야 365억원 → '24년 반도체·이차전지·로봇·바이오 등 약 1,100억원

- PD(Program Director)는 기존 사업기획 역할에서 벗어나 선정·수행·평가 등 R&D 전주기를 지원하는 성과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R&D 전문기관도 지원형 조직으로 재편

- (인재양성) 사람을 키우는 R&D를 강화
  - 인력양성 예산을 11% 확대하고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24년에 11개로 대폭 확대*

    * ('23년) 반도체 3개 → ('24년) 반도체·배터리 각 3개,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 추가
  -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공동 연구시 현지파견 연구비·체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대학·첨단산업 현장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한·미 첨단분야 청년인재(학부) 교류지원 : 1,923명('23~'27년)

    ※ 한·네 ASML[1]·IMEC[2] 연계 교육(석박사) 프로그램 500명('24~'28년)
  - R&D 전주기 프로세스에 신진연구자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증빙 간소화, 행정전담인력 제도 확산 등 석·박사생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

    ※ 역량 있는 공동연구자의 원활한 창업을 위해 휴·겸직, 주식취득 등 전면 허용 추진

    ※ 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를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발명 보상비율도 60%로 확대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한 투자전략과 제도혁신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

- 소형과제 지원 중단에 따른 수혜기업 범위 축소 및 특정 기업에 편중될 가능성, 참여기업의 자율성 확대로 인한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 등 사업집행의 투명성·공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사업기획 및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임길환 예산분석관(02-6788-4747)

1) ASML(ASM Lithography); 반도체 제조용 광학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 장치를 만드는 네덜란드 굴지의 다국적 기업
2) IMEC(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re); 세계 최고의 대학 간 반도체산업 국제 연구기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 확정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확정(2024.3.28.)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

- 제6차 종합계획('23~'27)('23.3월 발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31.3조원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재정투입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총계 (2023~2027)
복지·서비스	176,905
건강	3,306
보육·교육	1,713
경제활동	108,514
체육·관광	7,234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3,170
이동·편의·안전	11,225
권익증진	726
계	312,793

주: 전체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 중 제6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 예산만 포함하였으며, 향후 협의 과정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잠정치, 국비 기준)
자료: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관계부처 합동(2023.3.)

●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 및 확정(2024.3.28.)

- 정부는 2024년 시행계획을 통해 장애인 돌봄·건강·교육·소득 등 전방위적 지원 및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

-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금년도 장애인 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0조 원을 투입할 예정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 (복지·서비스 분야)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결정권 강화
  - (돌봄) 자·타해 등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행, 24시간 1:1 지원(340명) 및 주간 개별 또는 그룹(2,000명)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 제공
  - (거점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 추가 지정(12 → 16개소)
  -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상향(15,570원 → 16,150원) 및 지원대상 확대(11.5만 명 → 12.4만 명),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활동지원급여 신규('24.9월~) 지원
  - (장애아동)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 확대(연 960시간 → 1,080시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7.9만명 → 8.6만명) 추진
- (건강 분야)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 (종합계획)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마련

    ※ (주요 내용) 장애인 건강지표 및 정책목표 설정,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편의 제고, 장애유형·정도·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역량강화 등
  - (시범사업)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4.3.1.~)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24.2.28.~)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
  - (의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 개원(5개소 → 8개소),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1개소 확충(14개소 → 15개소) 등 의료 인프라 확대
- (보육·교육 분야)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 (인프라)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23년말 1,637개소) 62개소 추가 확충,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연 80학급 이상)
  - (발달검사)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 시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대상 확대(건강보험 소득 기준 하위 80% → 소득 기준 상관없이 지원)
  -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 대폭 확대(2,550명 → 9,000명),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 확대·지정(70개 → 82개)
- (소득·일자리 분야)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6% 인상(323,180원 → 334,810원(+11,630원)), 부가급여액 인상(8만원 → 9만원),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 130만원)

- (일자리)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천개 확대(29,546명 → 31,546명)하고,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3.6% → 3.8%)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의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고용컨설팅 강화
- (출퇴근비용) 중증 장애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 인상(월 5만원 → 7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 (체육·관광·문화예술 분야) 장애인의 체육·관광·문화예술 확대

- (체육 참여환경)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신규선정 지원('23년말 누적 89개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 확대(19세~64세 → 5세~69세) 및 지원규모 확대(1인당 월 9만 5천원 → 월 11만원)
- (관광, 예술 지원)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62개소까지 확대, 장애 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 상향(1천만원 → 2천만원)
- (미디어 접근성)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방송수신기(TV) 성능 개선 및 보급을 확대('24년 3.2만대 보급 예정)하여 방송 시청 격차 해소

● (이동·안전 등 권익향상 분야) 장애인 이동, 편의, 안전 등 권익향상

- (교통) 저상버스 도입 지원('24년 1,675억원, 3,765대),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의 도입 지원('24년 131억 원, 575대)
- (학대) 피해 장애 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 장애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 (출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을 인상(태아 1인당 100만원 → 120만원)

추진 시 고려사항

● 장애 인구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

- 장애 인구의 고령화, 장애인 1인 가구 증가, 발달장애 비율 증가가 뚜렷하며, 지체장애 비율은 감소

  ※ 등록장애인 수 ('15) 249만명 → ('21) 265만명, 노인 비율 ('14) 43.3% → ('20) 49.9%, 1인가구 비율 ('14) 24.3% → ('20) 27.2%, 발달장애 비율('11) 7.3% → ('21) 9.6%, 지체장애 비율('11) 52.9% → ('21) 45.1%

- 발달장애는 평생에 걸쳐 일상생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추이 또한 돌봄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추진 시 수요 변화에 따라 대응할 필요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안수지 예산분석관(02-6788-4646)

2024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발표(2024. 1. 31.)

- **기획재정부는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공공기관을 지정**
  - 기획재정부는 기관의 규모(자산, 수입, 인력 등)와 정부 지원 정도,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신규지정, 해제, 유형변경 등을 매년 실시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 공공기관 중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 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85%)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
  - 공기업은 자산규모(2조원)와 자체수입(총수입의 85%)을 기준으로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분류
  -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정부업무를 위탁 집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
  -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을 의미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 colspan="3">분류기준</th><th>기관 예시</th></tr>
<tr><td rowspan="2">공기업
(32개)</td><td>시장형
(14개)</td><td rowspan="4">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td><td rowspan="2">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td><td>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td><td>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td></tr>
<tr><td>준시장형
(18개)</td><td>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td><td>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td></tr>
<tr><td rowspan="2">준정부
기관
(55개)</td><td>기금관리형
(12개)</td><td rowspan="2">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미만</td><td>「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관리 또는 위탁관리</td><td>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td></tr>
<tr><td>위탁집행형
(43개)</td><td>정부업무의 위탁집행</td><td>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td></tr>
</table>

유형	분류기준	기관 예시
기타공공기관 (24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및 변동 현황(2024년 4월 기준)

- 2024년 4월 기준 대한민국 공공기관 수는 327개로 2022년 347개 대비 20개 감소
  - (신규지정 +3)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이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
  - (지정해제 △23) 연구개발 관리체계 전환이 적용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 연구기관'(총 22개)과 타기관(케이워터운영관리(주))에 통폐합되어 지정실익이 없어진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 (유형변경) 한국도로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변경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수는 각각 32개, 55개로 전년과 동일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20개 감소(260개 → 240개)

공공기관 지정 현황

(단위: 개)

구분		2023	2024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2	32	-	-	-	-
	▪ 시장형	13	14	+1	-	-	+1
	▪ 준시장형	19	18	△1	-	-	△1
② 준정부기관		55	55	-	-	-	-
	▪ 기금관리형	11	12	+1	-	-	+1
	▪ 위탁집행형	44	43	△1	-	-	△1
③ 기타공공기관		260	240	△20	+3	△23	-
합계		347	327	△20	+3	△23	-

공공기관 변동 현황

구분	주무부서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3)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기타공공기관
	산림청	한국치산기술협회	기타공공기관
	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	기타공공기관
해제 (△23)	환경부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지정 해제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연구개발 관리체계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취지)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유형 변경 (2)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지정 변경 (준시장형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변경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1.31)

2024년도 부처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2024년 4월 기준)

- 2024년도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및 산업 분야 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41개로 가장 많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이 31개로 두 번째로 많은 상황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체육, 관광 및 문화 분야의 공공기관이 지정
  -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교통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이 지정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부처명	공공기관수	부처명	공공기관수
기획재정부	4	인사혁신처	1
교육부	22	식품의약품안전처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관세청	1
외교부	2	통계청	1
통일부	2	재외동포청	1
법무부	3	방위사업청	2
국방부	3	경찰청	1
행정안전부	3	소방청	1
국가보훈부	3	국가유산청	1
문화체육관광부	31	농촌진흥청	1
농림축산식품부	12	특허청	6
산업통상자원부	41	산림청	5
보건복지부	28	기상청	3
환경부	11	방송통신위원회	2
고용노동부	12	공정거래위원회	2
여성가족부	5	금융위원회	7
국토교통부	28	원자력안전위원회	3
해양수산부	17	국무조정실	25
중소벤처기업부	11	총 327개	

공공기관평가과 이상아 예산분석관(02-6788-3745)

해외재정동향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년 중간 경제전망보고서 발표
- 미국, 2024회계연도 예산 확정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IMF는 2024년 4월 16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WEO) 발표

- IMF는 세계경제가 2024년에는 3.2%(2024년 1월 전망 대비 0.1%p 상승), 2025년에는 3.2%(2024년 1월 전망과 동일)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미국 경제가 기존 예상 보다 강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몇몇 국가가 기존 예상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 경제 성장 효과가 일부 상쇄

    ※ 유로지역의 경제는 소비자 심리 약화, 높은 에너지 가격, 금리 인상에 따른 제조업과 기업 투자의 약세로 성장 둔화
  - 재정지출의 감소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정책금리 인상, 생산성 향상 둔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24~2025년의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0~2019년 세계 평균 성장률(3.8%) 보다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및 식재료 가격 충격 완화와 일자리 감소, 긴축통화 정책, 실업률의 소폭 상승, 노동 공급 증가 등 노동시장 경색의 완화가 반영되어 물가상승률 하락 예상
  -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2024년 5.9%에서 2025년 4.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미국과 개발도상국의 인플레이션 예상 증가분이 유럽 및 일본 등에서의 인플레이션 예상 감소분을 상회하여 2024년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2024년 1월 전망 대비 0.1%p 상승
-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24년 2.3%(2024년 1월 전망과 동일), 2025년 2.3%(2024년 1월 전망과 동일)으로 전망
  -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미국(2.7%) 다음으로 높은 수준
  - 2024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IMF의 전망은 국내 주요 기관의 전망 보다 높은 수준

주요 기관의 2024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IMF ('24.4.)	정부 ('24.1)	NABO ('24.3)	IB 평균 ('23.10)	한은 ('24.2)	OECD ('24.2)	Moody's ('23.5)	S&P ('23.9)	Fitch ('24.3)
2.3	2.2	2.2	2.0	2.1	2.2	2.4	2.3	2.1

자료: 각 기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 (미국) 2023년 2.5%, 2024년 2.7%, 2025년 1.9%로 기존 전망 대비 성장률 상승
  - 2023년 4분기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였고 2024년 강한 성장력이 기대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2024년 높은 성장률 전망, 2025년에는 점진적인 긴축재정과 노동시장의 약화로 총수요가 감소할 전망
- (유로존) 2023년 0.4%의 저성장에서 2024년 0.8%, 2025년 1.5%로 회복 전망
  - 우크라이나 전쟁에 노출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과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가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영국) 2023년 0.1%에서 2024년 0.5%로 소폭 상승 후, 2025년 1.5% 성장
  - 높은 에너지 가격의 지속에 따라 2024년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보인 후, 물가상승률 하락으로 금융 여건이 완화되고 실질 소득이 회복될 전망
- (중국) 2023년 5.2%에서 2024년 4.6%, 2025년 4.1% 성장
  - 가계소비와 정부 지출 증가 및 부동산 부문의 약세가 지속될 전망

IMF 세계경제전망(WEO)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 %p)	'23년	'24년			'25년		
		'24.1월 전망 (A)	'24.4월 전망 (B)	조정폭 (B-A)	'24.1월 전망 (C)	'24.4월 전망 (D)	조정폭 (D-C)
세 계	3.2	3.1	3.2	+0.1	3.2	3.2	0.0
선진국	1.6	1.5	1.7	+0.2	1.8	1.8	0.0
- 미국	2.5	2.1	2.7	+0.6	1.7	1.9	+0.2
- 유로존	0.4	0.9	0.8	△0.1	1.7	1.5	△0.2
독일	△0.3	0.5	0.2	△0.3	1.6	1.3	△0.3
프랑스	0.9	1.0	0.7	△0.3	1.7	1.4	△0.3
이탈리아	0.9	0.7	0.7	0.0	1.1	0.7	△0.4
스페인	2.5	1.5	1.9	+0.4	2.1	2.1	0.0
- 일본	1.9	0.9	0.9	0.0	0.8	1.0	+0.2
- 영국	0.1	0.6	0.5	△0.1	1.6	1.5	△0.1
- 캐나다	1.1	1.4	1.2	△0.2	2.3	2.3	0.0
- 한국	1.4	2.3	2.3	0.0	2.3	2.3	0.0
- 호주	2.1	1.4	1.5	+0.1	2.1	2.0	△0.1
- 기타 선진국	1.8	2.1	2.0	△0.1	2.5	2.4	△0.1
신흥개도국	4.3	4.1	4.2	+0.1	4.2	4.2	0.0

(%, %p)	'23년	'24년			'25년		
		'24.1월 전망 (A)	'24.4월 전망 (B)	조정폭 (B-A)	'24.1월 전망 (C)	'24.4월 전망 (D)	조정폭 (D-C)
- 중국	5.2	4.6	4.6	0.0	4.1	4.1	0.0
- 인도	7.8	6.5	6.8	+0.3	6.5	6.5	0.0
- 러시아	3.6	2.6	3.2	+0.6	1.1	1.8	+0.7
- 브라질	2.9	1.7	2.2	+0.5	1.9	2.1	+0.2
- 멕시코	3.2	2.7	2.4	△0.3	1.5	1.4	△0.1
- 사우디	△0.8	2.7	2.6	△0.1	5.5	6.0	+0.5
- 남아공	0.6	1.0	0.9	△0.1	1.3	1.2	△0.1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IMF의 정책 권고

-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
- 중기 재정 안정성 확보에 집중하여 미래 위험에 대응한 예산의 활용과 우선순위 투자를 위한 여력을 확보하고,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
- 공급 확대를 위한 개혁으로 인플레이션과 부채 문제 모두에 대응하고 중장기 생산성 향상을 가속할 필요
- 지정학적 분절과 기후 변화에 따른 비용과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필요
- 시장 경쟁, 무역 개방, 금융접근성 확대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의 변화 필요
- AI 등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국가간 지식재산권 등 규제를 확립하여 기술 개발에 따른 이득이 공정하고 광범위하게 공유되도록 할 필요

예산분석총괄과 임동훈 예산분석관(02-6788-37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년 중간경제 전망보고서 발표

OECD는 2024년 2월 5일 중간 경제전망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Februrary 2024) 발표

최근 경제상황

- 2023년 예상보다 빠르게 물가상승률이 완화되면서 세계경제의 회복력은 입증되었으나 연말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보여주지 못함
  - 2023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및 미국 경제 성장세 등에 힘입어 회복된 흐름을 보였고 신흥국은 거시경제정책 대응, 인프라 투자 증가 등으로 성장흐름을 지속하였음
  - 반면 유럽 경제는 은행 중심 금융구조에 따른 고금리 영향 확대, 에너지 가격 충격의 부정적인 영향 지속 등으로 성장흐름이 약화되었음. 최근 고빈도지표[1)]는 세계경제의 원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세계무역의 침체는 지속되고 있음

    ※ 홍해지역 긴장상황에 따른 아시아-유럽 경로의 운송기간 지연 등 국제해상 운송비용이 급속히 상승, OECD 연구에 따르면 최근 운송비용이 100% 증가하였고 사태가 지속될 경우 OECD 국가의 연간 수입 물가상승률은 약 5%p 증가, 대략 1년 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4%p 증가할 것으로 예측

경제전망

-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3년 3.1%에서 2024년 2.9%(직전전망('23.11.) 대비 0.2%p 상향)로 감소하지만 2025년에는 금융여건이 완화됨에 따라 3.0%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팬데믹 이후 공급병목 현상(공급망 차질 여파)의 감소, 주요 선진국의 긴축적 거시경제정책,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제약 등이 글로벌 성장세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

    ※ 2025년에는 세계 경제성장률(3.0% 전망)이 통화정책 완화 및 실질소득의 회복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목표 금리 수준으로 수렴

1) 구매자관리지수(PMI), 소비자신뢰도(Consumer Confidence) 등 고빈도활동지수(High-frequency activity indicators)

●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 미국 경제성장률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및 정책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가계 저축의 감소와 강력한 정부 지출이 2024년에 완화, 2024년 2.1%에서 2025년 1.7%로 하향
- 유로지역은 긴축정책에 따른 수요 저하로 2024년 상반기는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소득이 강화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2024년 0.6%에서 2025년 1.3%로 상향
- 일본은 임금성장률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취하면서 2024년과 2025년 모두 경제성장률이 1.0%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도의 하락과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이 민간소비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전망, 2024년 4.7%에서 2025년 4.2%로 감소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24년 2.2%에서 2025년 2.1%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직전전망 대비 0.1%p 하향, 2025년은 유지)

OECD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구분	2023	2024		2025	
		중간경제전망 ('24.1.)	11월 전망('23.11) 대비 차이	중간경제전망 ('24.1.)	11월 전망('23.11) 대비 차이
세계	3.1	2.9	0.2	3.0	0.0
G20[1]	3.3	2.9	0.1	3.0	0.0
호주	2.0	1.4	0.0	2.1	0.0
캐나다	1.1	0.9	0.1	1.9	0.0
유로 존	0.5	0.6	△0.3	1.3	△0.2
독일	△0.1	0.3	△0.3	1.1	△0.1
프랑스	0.9	0.6	△0.2	1.2	0.0
이탈리아	0.7	0.7	0.0	1.2	0.0
스페인[2]	2.5	1.5	0.1	2.0	0.0
일본	1.9	1.0	0.0	1.0	△0.2
한국	1.3	2.2	△0.1	2.1	0.0
멕시코	3.1	2.5	0.0	2.0	0.0
튀르키예	4.1	2.9	0.0	3.1	△0.1
영국	0.3	0.7	0.0	1.2	0.0
미국	2.5	2.1	0.6	1.7	0.0
아르헨티나	△1.0	△2.3	△1.0	2.6	0.7
브라질	3.1	1.8	0.0	2.0	0.0
중국	5.2	4.7	0.0	4.2	0.0
인도[3]	6.7	6.2	0.1	6.5	0.0

구분	2023	2024		2025	
		중간경제전망 ('24.1.)	11월 전망('23.11) 대비 차이	중간경제전망 ('24.1.)	11월 전망('23.11) 대비 차이
인도네시아	4.9	5.1	△0.1	5.2	0.0
러시아	3.1	1.8	0.7	1.0	0.0
사우디아라비아	△0.9	2.4	△0.6	4.2	△0.5
남아프리카공화국	0.5	1.0	0.0	1.2	0.0

주 1) 유럽연합은 G20의 회원국이지만, G20 집계에는 자체적으로도 회원국인 국가만 포함됨
2) 스페인은 G20의 영구 초대국(permanent invitee)
3)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
자료 :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February 2024, p5, Table1.

주요 기관의 2024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IMF ('24.4.)	정부 ('24.1.)	NABO ('24.3.)	Goldman Sachs ('23.11.)	한은 ('24.2.)	OECD ('24.2.)	KDI ('24.2.)	S&P ('23.5.)	Fitch ('24.3.)
2.3	2.2	2.2	2.3	2.1	2.2	2.2	2.4	2.1

자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물 가

- G20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2023년의 3.6%에서 2024년에는 2.6%, 그리고 2025년에는 2.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2025년 말까지 대부분의 G20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목표금리와 일치할 것으로 전망
  - G20 국가들의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2024년(6.6%)에 2023년(6.3%)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아르헨티나(250.6%)와 터키(49.3%)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왜곡된 현상

    ※ 2024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중간 경제전망은 2.7%(직전전망과 동일함)
  - 노동시장 내 수요·공급 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다수 국가들의 노동시간이 안정화되고 일자리 증가세는 약화되었으나, 약한 생산성 증가세로 인해 단위노동비용[2]은 4%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

2) 단위노동비용지수 = 노동비용/산출량 = $\frac{\text{노동비용/노동투입량}}{\text{산출량/노동투입량}}$ = $\frac{\text{노동1단위당비용}}{\text{노동생산성}}$ X 100 (출처: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연구·통계 데이터 포탈 홈페이지)

리스크 요인

-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은 지정학적 불안(중동 분쟁), 기후변화 및 금융시장 불안(안전자산 선호 심화 가능성), 서비스 부문 물가 상승 압력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반등임
- 지난 긴축통화정책의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 국가는 가계·기업의 부채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이 하향 조정될 위험도 존재

OECD의 정책권고

- 통화정책은 잠재된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
  -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완화되는 경우, 명목 정책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여지가 생기고 이에 따라 2024년 제2·3분기에 미국과 유로 지역에서 정책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주요국은 당분간 긴축적 기조를 지속하면서 정책금리를 유지할 것을 권고
  - 정책금리 인하의 시점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안정적인 재화 가격,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서비스 부문 물가 상승압력 완화 등임
- 늘어난 공공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지출 확대 요인을 감안한 세제·지출 개혁이 필요
  - 지난 15년간 각국의 공공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만기도래 국채가 보다 이자율이 높은 국채로 대체됨에 따라 이자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고령화와 기후변화, 국방지출 증액도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
  - 기대 수명의 변화에 따라 퇴직 연령을 연장하고 연금 체계를 연계하며, 고령자의 취업을 확대하는 등 향후 재정지출 압박을 완화할 필요. 과세대상을 노동에서 자산·소비로 전환하여 세입을 늘리고 세금 면제를 줄이는 등 과세 기반을 확대할 필요
-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강화를 위해 교육 분야, 국제교역,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적극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
  - 최근 교육영역의 성과 저하는 일부 교육 시스템에 장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 직업·평생 교육의 확대,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수요 매칭을 통해 성과를 확대할 필요
  - 국제교역을 활성화하고 탈탄소화 대응 및 소득하위 국가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을 제고할 필요

산업예산분석과 신지현 예산분석관(02-6788-4630)

미국, 2024회계연도 예산 확정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 폐쇄사태(government shutdown)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예산(continuing resolution)을 4차례 편성하면서 세출법안 합의를 지속한 결과, 2024회계연도 시작일(2023.10.01.)로부터 5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인 2024년 3월 23일 예산이 확정

- 회계연도 시작일인 10월 1일까지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운영이 제한되므로 미국 의회는 임시적인 조치로서 잠정예산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을 의결
  - 회계연도 개시일이 10월 1일로 개정된 1977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1989년, 1995년, 1997년)만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잠정예산 결의안은 관행으로 정착

(참고) 미국의 잠정예산제도와 연방정부 폐쇄 사태

- **의회에서 매년 회계연도 시작 시점인 10월 1일 전까지 예산안 통과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의 필수적 지출이 행해질 수 있도록 잠정예산 결의안 의결**
  - 잠정예산은 형식상 상하원의 공동결의안(joint resolution)으로 처리되며, 전체 세출법안 합의 시까지 전년도 또는 대통령 예산안의 일정 비율에 기반하여 전년도 세출 수준의 자금지원을 지속하도록 의회결의를 통해 결정됨
- **만약 미국 의회가 잠정예산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거나 결의안의 효력기간 만료 또는 결의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연방정부 폐쇄사태 발생**
  - 연방정부 폐쇄 발생 시 해당 기간 동안 국방, 인명의 안전이나 재산보호에 즉각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인원을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이 무보수 휴가 상태로 들어감
  - 1976년 이래로 연방정부 폐쇄는 총 21회 발생했으며, 2018회계연도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문제로 35일의 폐쇄가 발생한 것이 역대 최장임

- 잠정예산 결의안의 내용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량지출을 유지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세출법안별로 만료 기한을 상이하게 설정
  - 12개의 세출 소위원회(subcommittee)별로 12개 세출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총 4번의 잠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방정부를 계속 운영하였음
  - 그 중, 4차 잠정예산은 농업·에너지 등 4개 법안을 2024년 3월 8일까지, 국방 등 8개 법안을 2024년 3월 22일까지 논의하도록 하고, 부처별로 기한 내 현 수준의 지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임

- 상·하원에서 세출법안을 상대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과 적은 법안으로 구분하여 심의·의결
  - 미국 의회는 2023년부터 상·하원의 다수당이 다른 상황으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하원에서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음
  - 12개의 세출법안 중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농업·에너지 등 6개 법안은 3월 8일에, 쟁점이 많은 국방·보건복지 등 6개 법안은 3월 23일에 미국 의회의 표결을 거친 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으로 예산 확정

2024회계연도 재량지출(base discretionary spending)의 합의 규모[1)]는 1조 5,900억달러로서 직전 회계연도 확정 규모 대비 120억달러 감소

- Agriculture, Defense 등 5개 분야는 직전 회계연도 확정 규모 대비 합의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Labor, Health and Human Services, Education 등 7개 분야는 감소하였음
- 2023회계연도 확정 규모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Energy and Water Development이며, 7.8% 증가하였음
  - 해당 세출법안은 과학연구 및 신재생 에너지 연구에 대한 투자와 항만 유지를 위한 신탁기금 지원 등으로 구성됨

1) 의무지출은 법률에 의하여 지출이 의무화되어 있어 별도의 의회 승인절차가 불필요한 지출인 반면, 재량지출은 의회가 재량권을 갖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지출이므로 세출위원회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량지출의 규모임

세출 소위원회별 예산 규모(Budget Authority Allocations)

(단위: 십억달러)

세출 소위원회	2023회계연도 확정 규모 (enacted)	2024회계연도		
		합의 규모 (negotiated)	잠정예산 효력기간	의결 일자
Agriculture	25.5	26.2	24.03.08	24.03.08
Commerce, Justice, Science	82.4	66.5	24.03.22	24.03.08
Defense	797.7	824.5	24.03.22	24.03.23
Energy and Water Development	54.0	58.2	24.03.08	24.03.08
Financial Services and General Government	27.6	13.7	24.03.22	24.03.23
Homeland Security	60.7	61.8	24.03.22	24.03.23
Interior and Environment	38.9	38.6	24.03.22	24.03.08
Labor, Health and Human Services, Education	207.4	194.4	24.03.22	24.03.23
Legislative Branch	6.9	6.8	24.03.22	24.03.23
Military Construction, Veterans Affairs	154.2	153.9	24.03.08	24.03.08
State, Foreign Operations	59.7	55.8	24.03.22	24.03.23
Transportation,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87.3	89.5	24.03.08	24.03.08
합 계	1,602.3	1,589.9		

자료: CBO estimate of H.R.2617(FY2023 omnibus), Status of Discretionary Appropriations: FY24 House, Status of Discretionary Appropriations: FY24 Senat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행정예산분석과 우형규 예산분석관(02-6788-4643)

NABO Fiscal Trends & Issues
재정동향&이슈

2024년 Vol. 1 통권 제24호

발 행 일	2024년 4월 26일
발 행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디자인여백플러스 / 02-2672-1535

ⓒ 국회예산정책처, 2024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2-001546-08
ISSN	2734-0805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